

다시,
인권운동을
만나다

다산인권센터 30주년 기념 토론회



발표	<다산인권센터> 30주년 보고서 -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하승우(이후연구소)
토론1	지역, 인권운동	박영철(울산인권운동연대)
토론2	시민, 인권과 만나다	김성연(수원지역 탈조직원소속)
토론3	노동, 인권운동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4	연대, 인권운동	정록(인권운동사랑방)
토론5	종합토론	

목차

발표

	다산인권센터 30주년 보고서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01	1. 들어가며
03	2. 역사로 본 다산인권센터
16	3. 다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였나?
31	4. 다산인권센터에 대한 진단과 제안
43	5. 나오며
44	6. 참고문헌
45	7. 부록

토론 1

65	지역, 인권운동의 방향? : 울산인권운동연대의 경험을 중심으로
----	---------------------------------------

토론 2

73	시민, 인권과 만나다
----	-------------

토론 3

81	인권단체는 노동권과 어떻게 만나는가?
----	----------------------

토론 4

87	연대, 인권운동
----	----------

종합토론

91	
----	--

발표문

다산인권센터 30주년 보고서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

하승우(이후연구소)유해정(성공회대)

1. 들어가며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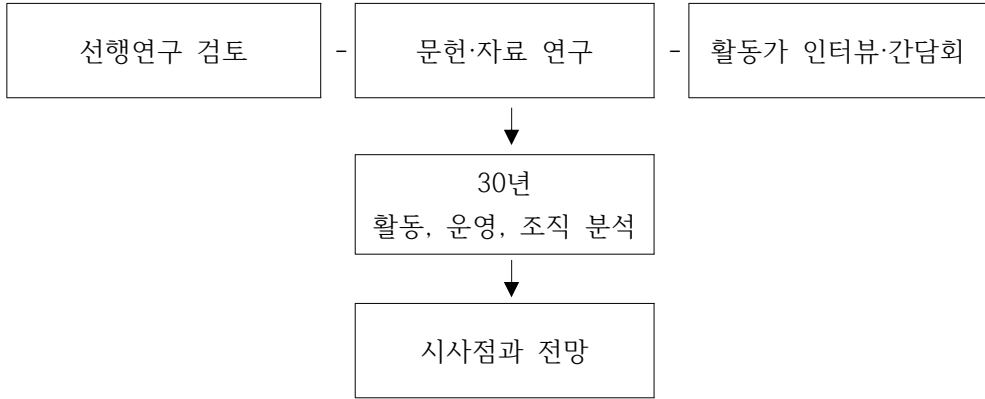
1992년 <다산인권상담소>로 활동을 시작한 <다산인권센터>가 2022년에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인권단체인 <다산인권센터>는 지난 30년 동안 전국적인 인권운동의 흐름에 있으면서도 지역적인 특성을 놓치지 않으며 인권운동에 있어 독특한 위상을 확보해 왔다. 예를 들어, 2000년 이후 한국 인권운동사에서 중요하게 기록될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반대 투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삼성 노동권 투쟁, 세월호 진상규명투쟁, 박근혜 퇴진투쟁 등에서 <다산인권센터>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동시에 수원과 경기남부의 여러 사안들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면서 자유권, 사회권, 반전평화 등 다양한 인권의제를 지역사회에 안착시키려 노력했으며, 1인 시위, 캠페인, 노동/인권교육, 수원촛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당한 권력에 저항해왔다.

30년간 상근활동가 다섯 명 내외의 규모로 운영된 <다산인권센터>가 이렇듯 적극적으로 인권의제를 제안하고 크고 작은 투쟁들에 주도적으로 결합할 수 있었던 계기와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체가 발전해온 역사만이 아니라 단체 활동의 특성, 단체의 운영구조 등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절차와 방법

연구진이 구상한 연구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수행도



[그림 2] 활동가 인터뷰·간담회 및 개요

목적	다산 30주년 활동 분석 및 전망			
대상	구분	대상		
	다산 활동가	다산 초창기 구성원 (1992년~)		
		다산 현재 구성원 (2006년~ 현재)		
	인권 활동가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인권단체 활동가: 인권단체연석회의 및 인권운동장 등 연대 경험				
주요 내용	주요활동	조직 및 운영구조	연대경험	향후 전망

이 보고서는 <다산인권센터>의 30주년을 돌아보며 활동과 운영의 특성을 파악해 위 질문에 답함과 동시에 그것을 기초로 이후의 전망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나아가 <다산인권센터>의 활동과 운영을 점검하는 것은 한 단체의 역사 정리를 넘어 지역에 기반한 인권운동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의 의의가 있다.

2. 역사로 본 <다산인권센터>

1) <다산인권센터>의 창립과 30년의 주요 활동

(1) 조직 형성기(1992~2002)¹⁾

<다산인권센터>는 1992년 8월 28일 <다산합동법률사무소>(현 <법무법인 다산>)의 <다산인권상담소>로 활동을 시작했다. 1990년 김칠준 변호사와 오세범 사무장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하여 활동을 시작하였고, 1991년 김동균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노동운동과 법조운동의 결합’이라는 문제의식 하에 본격적으로 수원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노동운동가 출신 오세범 사무장이 첫 상담실장을 맡아 운영한 <노동인권상담실>을 모태로 <다산인권상담소>가 문을 열었다. 변호사 사무소 개업 전부터 김칠준 변호사가 수원에서 생활법률상담과 노동운동사건, 시국사건 변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온 덕분에 <다산인권상담소>가 활동하기에 좋은 초기 조건이 형성됐다.²⁾ 당시에 <다산인권상담소>가 계간으로 발간했던 《다산인권》 제 2호(1996년 6월 17일 발간)는 <다산인권상담소> 운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약속을 실었다.

- (약속 1) <다산인권상담소>는 민주적 건강성과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상담소를 찾는 노동자, 시민들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에 답할 것을 약속합니다.
- (약속 2) <다산인권상담소>는 인권상담소에 걸맞은 다양하고 안정적인 사업영역의 개발 및 확대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사업을 전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 (약속 3) 이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여러 민주단체들과의 긴밀한 연대활동을 통하여 상담소에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이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산인권상담소>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무료상담 및 소송: 산재, 임금, 해고, 노동조합 등 노동문제와 공안사건에 관한 사항
- 노동교육: 노조설립, 노동법(단협, 과로사 등) 등 노조활동을 위한 교육
- 일반교육: 주택임대차(전세 등), 교통사고 등 일반 민·형사에 관한 교육
- 인권사업: 각종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 및 자료조사, 공익소송, 기획사업 등
- 소식지 발행 및 자료배포: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다산인권》 발행 및 각종 인권자료 수집 및 배포
- 회원모집: 다산인권상담소와 함께 인권지킴이가 되고자하는 모든 민주시민들을 모집
- 기타 인권의 영역과 관련된 사업 및 지역연대사업

1) 해당 내용은 다산인권센터 10주년 기념자료집의 내용을 발췌하여 기술한 내용임. 당시 다산인권상담소 출범 연도는 1992년도임에도 1993년도로 기재되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1992년도로 수정하여 바로 잡고자 함.

2) <법무법인 다산>의 명칭 변경 관련 내용은 정정훈(2021)을 참조할 것

위에서 보듯이 <다산인권상담소> 시절의 주된 활동은 법률대응이었다. 사업의 방점은 상담과 교육에 있었고, 이것은 자체 사업을 개발하는 것보다 지역 내 사안에 연대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만들었다. <다산인권상담소>가 발행한 《다산인권》도 ‘지역노동조합 동정’이라는 코너를 두고 경기남부지역 주요 노동조합의 임·단투 현황을 주로 다뤘다. 그리고 ‘상담소 25시’라는 고정코너는 <다산인권상담소>가 맡은 주요한 민·형사상의 소송 진행 현황(노동, 공안관련 등을 중심으로)을 소개했다. 반면 <다산인권상담소> 시절 인권사업은 다른 여러 사업들 중 하나로 다뤄졌다.

<다산인권센터> 《10주년 자료집》은 1992년부터 2003년까지를 세 시기로 구분한다(《10주년 자료집》에서는 1993년으로 기록됨)

- ① 노동상담과 법률 지원, 노조교육활동, 지역단체들과 연대하며 토대를 닦던 1기(1992~1995)
- ② 소장 직제를 만들며 노동인권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와 아파트공동체운동, 인권영화제로 활동영역을 확장했던 2기(1996~2000)
- ③ 활동가 소장체제에서 수평적 상임활동가체제로 전환하며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인권침해조사활동, 인권침해신고센터, 월례 인권포럼 등을 운영했던 3기(2001~2003)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던 2000년, <다산인권상담소>는 <다산인권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다양한 인권소식을 전하는 주간팩스신문 《다산인권》을 발행하며 조직을 정비했다. 그렇다면 상담소와 센터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단체가 분리되어 나오면서 실무역량이 송무에서 인권활동으로 이동했고 인권단체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졌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고민이 생겼고 활동가 중심 수평구조가 자리 잡게 된다. 그렇지만 다른 단체들과 달리 <법무법인 다산>의 재정지원 구조가 유지되면서 초기의 <다산인권센터>는 다른 운동단체의 재정을 떠받치던 회원구조에 대한 고민이 그리 깊지 않았다.

<다산인권센터>의 창립목적은 《다산인권》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다산인권센터> 창립 이후 격주마다 발행되었던 《다산인권》은 “이웃에게 이야기하듯 일상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를 미주알고주알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2000년 8월 23일 창간준비 제 1호를 냈고, 전교조 경기지부 민주화보상 신청, 안성 동방제약 188일 파업투쟁 승리, 골프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다뤘다. 그리고 2000년 10월 4일 정식 창간했다. 《다산인권》은 창간사에서 “우리는 먼저 인권유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단숨에 내달려갈 것이다. 인권을 유린하는 권력과 자본을 고발하고, 인권유린을 방치한 모든 법 제도를 고발할 것이다. 절반의 생각만을 강요했던 국가보안법과 그 안에서 길들여진 우리의 인권무의식에 대해서 질타를 가할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로 대응하는 자들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겠느냐며 독자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질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창간사는 <다산인권센터>의 목적이 체제 전환

같은 거창한 목적보다 권력과 자본에 저항하고 인간의 권리를 지키는데 있음을 선언했다.

인권단체로서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옹호활동, 인권교육사업, 청소년인권교육 등에 관심을 가졌고, 수원인권영화제는 <다산인권센터>를 대표하는 대중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지역단체로서 <다산인권센터>는 사회복지대학, 노인복지사업, 아파트공동체 등의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런 활동은 이후 <경기복지시민연대>라는 별도 단체의 설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초창기 <다산인권센터>의 설립에 있어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운동의 의제나 조직의 운영구조에서 좋은 모델이 되었다.³⁾ <인권운동사랑방>은 1993년 진보적 인권운동을 표방하며 서울에서 문을 연 이래, 2000년 초반 자유권, 사회권, 인권교육, 인권영화제, 《인권하루소식》, 인권정보자료실 등으로 직제를 편성하고, 인권 의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대표와 사무국장 등의 직위를 없애고, 상임활동가들의 대표성과 단체 내 민주성 및 평등성을 강화했다. <다산인권센터>가 2000년 이후 활동영역을 자유권, 사회권, 인권교육, 인권영화제, 주간 《다산인권》 발행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추진한 것이나, 2002년도에 활동가들 사이의 권위주의, 수직적 관계를 탈피하자며 전원 상임활동가체제로 바꾼 것은 일정 정도 <인권운동사랑방>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다산인권센터>의 창립 때부터 형성된 분명한 차별성도 존재한다. 그것은 노동인권, 지역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이 점은 그 다음 10년에도 영향을 미친다.

(2) 정체성 형성기(2003~2012)

2002년 10월 10일 <다산인권센터>는 소식지인 《몸살》 제 1호를 발간했다. 《몸살》 제 1호는 인권침해신고센터를 개소해서 경기도 지역의 인권상담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노동인권과 더불어 국가기관(교도소, 구치소, 경찰, 검찰 등)의 인권침해와 평등권 침해 등을 다루겠다고 공언했다. 그렇지만 이후 자료에서 이 센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찾기는 어렵고, <다산인권센터>는 인권교육기획팀과 인권대응팀, 사회권 전략팀으로 역할을 나누어 활동을 시작했다.

<다산인권센터>는 송원찬, 박진, 노영란 세 상임활동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배치했고, 송원찬 활동가는 자유권, 《다산인권》, 총무를, 노영란 활동가는 사회권, 연대사업, 인권영화제, 다산인권포럼을, 박진 활동가는 청소년인권, 인권교육, 소식지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다 노영란 활동가가 휴직하고 박진 활동가가 사회권 활동을 맡으면서 삼성 노동권 투쟁이 본격화된다.⁴⁾ 2002년 월드컵 당시 아동노동착취반대 캠페인

3) 박진 활동가는 <다산인권상담소>에서 <다산인권센터>로의 전환과정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요한 모델이었다고 설명한다. “사랑방을 모델로 설정했던 것은 사랑방이 인권운동판의 ‘대표선수’이기도 했고, 조직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수평적 체제를 먼저 실행했던 조직이었기 때문이었어요.”(박진, 2017)

4) “제가 확실히 달라졌던 것은 2004~2005년경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삼성휴대전화 위치추적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다산 내에서도 변동이 좀 있었습시다. 저는 인권교육 등을 맡고 있었고, 인권 이슈를 맡았던 것은 노영란 활동가였는데, 그때 노영란 활동가가 ○○이 발병해서 휴직에 들어갔어요. 연차가 있는 활동가가

이후 노동인권이라는 주제가 <다산인권센터>의 주요한 정체성이 되었다. 뒤에 다시 다루겠지만 노동인권은 민주노조운동의 약화와 취약한 노동권이라는 사회조건을 고려해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조직하고 노동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었다.⁵⁾ 그리고 2003년 4월 이라크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가파병을 막기 위한 반전·평화권 활동도 <다산인권센터>의 활동의제가 되었다.

기록할 만 한 점은 2007년 1월 9일에 나온 《몸살》 신년호에서 평택 대추리, 삼성 노동권, 인권교육, 연대활동과 더불어 대중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점, 특히 주민운동을 결의했다는 점이다. <다산인권센터>는 2007년 상반기 동안 빈민운동, 풀뿌리운동 등을 조사한 이후 하반기에 센터를 동네로 이전해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권운동을 기획하겠다고 선포했다.

<다산인권센터>로의 전환을 함께 했고 처음이자 마지막 활동가 소장을 맡았던 송원찬 활동가는 《20주년 자료집》에서 당시의 변화를 활동가의 교체로 설명한다.

“2003년 이후 청소년 모의법정 대본 공모사업 확대 시행, 제 8회 인권영화제 개최, 한총련 합법화 및 국가보안법 폐지, 수원 남부서 의경 자살 사건 대응, 경제자유구역 저지 등 자유권과 사회권 현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산인권센터>의 고군분투가 시작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활동가 총원이 요구되었고 수원인권영화제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정상용 활동가가 들어오면서 이라크 파병반대 등 반전평화 운동을 수원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또한 네이스 투쟁 등 정보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담당할 토리(박김형준)가 <다산인권센터>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산인권센터>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한마디로 세대교체 바람이다. 10주년을 넘어 2005-06년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다산인권센터>를 지켰던 활동가들이 하나둘 활동을 이전한 것이다. 송원찬 활동가는 <경기복지시민연대>라는 복지운동단체, 정상용 활동가는 귀농, 노영란 활동가는 건강상 이유로 정리하면서 새롭게 판을 짜야 할 상황이었다. 박진 활동가를 중심으로 그동안 <다산인권센터>에서 자원활동을 하던 최성규, 김경미(메달) 활동가가 새롭게 들어왔다. 이때부터 <다산인권센터>는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활동의 내실을 꾀하게 된다. 반전평화연대 활동 등을 함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하던 활동들을 인계받고,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죠. 기존에 이슈에 참여할 때에는 송무나 상담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때부터는 사건에 직접 붙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사자들, 삼성 해고자들을 만나면서 삼성노동권 투쟁을 수원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박진, 2017)

- 5) “노동운동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사회운동 전반, 지역운동 전반 등의 자원과의 연결이 되어야만 해결이 되는 데, 그런 측면에서는 노동운동이 약하죠. 그런 자원과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인권단체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 전부터 생긴 고민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공장 담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이 어떻게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안산에 ‘노동자 공제회’같은 사례가 있어요. 공단 조직화가 잘 안 되는 곳에서 오히려 시민으로서, 시민으로의 노동자, 그들의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공제회를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공장 안의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퇴근만 하면 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조끼만 입으면 시민임을 까먹어요. 밖에 있는 시민들도 자신이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이 간극들을 좁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박진, 2017)

게 해온 메달이 활동가로 총원되었고, 이후, 월드컵 아동 노동 캠페인 당시 수원대에서 함께 활동한 김산이 활동가로 합류했다. 메달은 인권교육과 학생인권을 맡았고, 김산은 노동권을 중심으로 함께 일했다. 현재 메달은 자원활동을 계속 해온 난다와 인권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수원춧불, 지역운동포럼 등 <다산인권센터>의 지역활동을 같이 한 지역운동의 핵심 일꾼 안병주가 <다산인권센터>에 결합한다. 그리고 자원활동을 하면서 노동인권교육을 함께 해온 랄라가 함께 활동하게 된다. 안병주와 랄라는 경기지역 장기 투쟁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희망김장, 사람꽃 콘서트를 통해 노동인권 네트워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팔탄 폭파사건 인권침해 진상조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경기이주공대위,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위한 반올림 등의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안산 SJM 용역경비 인권침해 사건의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난다는 메달과 함께 2013년 설립을 목표로 인권교육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송원찬, 2012: 39)

위 글에서 보이듯 <다산인권센터>의 활동은 활동가의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고, 이 점도 중요한 활동의 특성이 된다.

이와 더불어 지역인권운동으로의 모색도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2009년부터 지역운동포럼이 진행되었는데, 2012년 《몸살》 1-2월호를 보면, 지역인권운동의 전망모색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인권도시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2011년 경기민연련 후원주점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계기로 단체 내 성폭력, 권위주의, 나이에 의한 차별 등을 성찰하기 위한 ‘인권친화적인 단체운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이것은 인권의 원칙을 지역사회에 적용하려는 노력의 출발로 볼 수 있다.

다음 시기로 넘어갈 당시 <다산인권센터>에서는 인권교육팀, 노동인권팀, 매체편집팀, 라디오팀, 대안세계화팀이 활동했다. 활동가에 따라 팀은 계속 바뀌었지만 이 시기는 <다산인권센터>의 활동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정체성을 형성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다산인권상담소> 시절부터 2021년까지 <다산인권센터>에서 24년간 활동한 박진 활동가 역시 이 시기를 <다산인권센터>가 인권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료히 확립한 시기로 규정한다. 2000년 <법무법인 다산>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인권단체임을 표방하긴 했지만 2004년 삼성 노동권 투쟁, 2006년 대추리 투쟁들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얼굴을 보고, 이들의 삶에 굉장히 밀착된 활동을 하면서 인권의 언어로 사회문제들을 마주하고 다산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기 때문이다.

“다산이 워낙에 법률사무소의 부설 기구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00년부터 독립된 인권단체라고 표방을 했지만 실제로 인권운동가답게 현장을 뛰면서 같이 했던 거는 2005년에 삼성 노동권 투쟁하고 2006년에 대추리 투쟁하면서였기 때문에 (중략) 그 즈음 그런 투쟁을 기반으로 해서 다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정리를 한 것 같아요.”(박진, 2022)

(3) 정체성 강화기(2013~2022)

2013년 10월 <인권교육 온다>가 독립하고, 20주년 이후 <다산인권센터>는 2013년 사무실을 이전하고 지역인권운동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타진하기 시작한다. 2013년 3월부터 인권도시 워크숍을 진행하고 2014년엔 인권인문학 특강을 신설한 것은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다산인권센터>는 2013년 인권운동 다짐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선언했다.

- 하나, 우리부터 평등하고 억압이 없는 인권운동
 - 단체 내 위계와 억압, 차별 없는 체계를 만듭니다.(반성폭력, 인권규약)
 - 활동가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재정적 기반을 튼튼히 합니다.(2년 내 생활임금)
 -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운영규칙, 공부모임 등 보완)
- 둘, 자본과 권력을 감시하는 인권운동
 - 공권력(경찰, 검찰, 교정기관 등)을 감시합니다.
 - 기업에 의한 노동인권 배제와 차별에 맞서고 저항합니다.
 - 삼성 내 노동인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조직하고 실천합니다.
- 셋, 인권의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인권운동
 - 주민운동과 인권운동이 만나는 지역운동을 고민합니다.
 - 우리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소수자들, 주체들을 만나고 조직합니다. (청소년, 청년, 노동자, 주부 등)
 - 인권교육과의 만남을 모색하고, 새로운 인권운동으로 담아냅니다.
 - 다양한 인권 프로그램(인권 기행, 찾아가는 인권 강좌 등)을 기획하고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동네와 지역 속으로 파고드는 운동을 만들어갑니다.
- 넷, 인권운동을 넘는 인권운동
 - 세계인권선언을 넘는 동네/지역 인권선언(예 : 매교동선언)을 준비합니다.
 - 제도화되는 인권의 한계를 인식하고 제도 밖의 인권을 끊임없이 제기하기 위한 활동 기반을 마련합니다.
 - 인권이 유행처럼 번지는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개입하며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 고민하는 활동을 만들어갑니다.
- 다섯,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
 - UN 이주민권리협약 가입운동을 전개합니다.
 - '지역 빈곤 리포트 발간' 등의 작업과 실천·연대활동을 통해 빈곤과 차별에 저항합니다.
 - 범죄대책으로 후퇴하는 인권조치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인권적 대안을 만들고 인권친화적 사회를 향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 부차화된 노동, 그 속에 부차화된 인권을 찾는 노동인권활동을 전개합니다.
- 여섯, 재정적으로 튼튼한 인권운동
 - 베타리(후원회원)의 참여와 후원으로 단체를 운영합니다.
 - 기업/정부 지원은 계속 받지 않습니다.
 - (지방)정부 재정지원은 기획된 활동, 간섭 없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재정보호를 위해 별도의 재정사업단을 고민합니다.

일곱, 인권담론을 확산하는 인권운동

- 인권운동이론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활동을 쌓아갑니다.
- 보이지 않는 인권의 의제와 주체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활동을 실천합니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전국적인 이슈에 대한 <다산인권센터>의 활동도 늘어났고, 이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이후의 진상규명활동, 4.16연대 활동으로 이어진다. 활동가 인터뷰에서도 이 시기의 주요 활동은 세월호 활동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집시법 개정, 국가정보원 감시,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 실태조사처럼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활동도 활발해졌다.

그럼에도 <다산인권센터>는 의식적으로 지역과의 연계성을 놓지 않으려 했고, 그런 점에서 수원촛불의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촛불의 흐름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에서 세월호 참사, 박근혜 퇴진운동으로 이어졌다. 이 지역촛불이 <다산인권센터>의 정체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지역인권운동이라는 전망이 지역촛불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원 촛불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시민들과 교류하고 단체들과의 결합도도 높아졌다. 그리고 이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냈다.

수원촛불을 통해 지역인권운동이라는 센터의 지향이 조금씩 구체화되었고, 논의도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에 인권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다산인권센터>의 주도로 경기·수원지역의 활동가들은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을 결의하기도 했다.

- 첫 번째.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두 번째.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학력/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니다
- 네 번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다섯 번째.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 여섯 번째.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일곱 번째.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이것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 지역사회만이 아니라 지역운동 내에도 인권운동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인권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과 더불어 운동과정에 다산만의 유쾌함을 드러내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2016년 총선 당시 문제적 후보자를 겨냥해 진행한 ‘수원의 막돼먹은

친구를 소개합니다'처럼 무거운 주제를 가벼운 방식으로 다루면서 대중성을 확장하려는 노력도 돋보였다.⁶⁾ 매년 2월마다 열린 '벗바리와 함께하는 만두잔치' 역시 <다산인권센터>에 오가는 벗바리들의 문턱을 낮추면서도 시의적인 주제를 유쾌하게 다루는 자리였다. 이 시기에 <다산인권센터>는 적극적으로 지역정치에 개입하려 했다.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쳤고, 더 나아가 어떤 권력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나아갔다. 한국의 인권운동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문제 삼았다면, 세월호 이후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로 문제의식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활동에서도 이런 고민이 엿보인다.

또한 새로운 영역으로 인권운동을 확장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수원 원천리천에서 삼성전자의 폐수 방류로 물고기가 집단폐사하자 이를 공론화시킨 일이다. 이미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조례들이 있었지만 이를 지역사회 알권리와 연계시켜 전국 최초로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만들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만든 중요한 성과이고, 지금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대응에도 인권의 원칙을 결합시키는 고민을 하고 있다.

2) <다산인권센터>의 주요 활동의제 정리

<다산인권상담소> 시절에는 법률사무소의 송무와 인권활동이 혼재되어 이루어졌다. 《다산인권》에 실린 '상담소 25시'를 보면 해고나 임금청구, 산재사건 등의 민사소송과 애국동맹, 한총련, 국가보안법 위반, 철거민 사건 등의 형사소송 등이 활동의 주를 이룬다. 하지만 <다산인권센터>로 전환해 활동하면서 <다산인권센터>는 매우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인권의제를,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다산인권센터>의 주요 활동의제를 <다산인권센터> 소식지 《몸살》에 실린 내용으로 살펴본다.⁷⁾ 활동을 별도의 연도 표기 없이 주제별로 배치했다.

국가폭력대응 및 권력감시 등	·수원남부경찰서의 미성년 피의자 가혹수사 사건 ·한총련합법화 경기대책위 ·인권단체 경찰폭력팀 구성
--------------------	--

6) “……다산이 가지고 있는 유쾌함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운동을 진지하고 딱딱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데 사람들한테 운동의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 유쾌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산이 그동안 잘 해 왔던 다산다움이라고 생각해요. 다산에서 활동하기 전에 다산을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현안대응에 있어서 무조건 싸우자 투쟁, 너네들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활동만이 아니라 국정원의 불법사찰의 문제를 꼬집으면서 국정원 앞에서 전을 부치는 퍼포먼스를 기획하고, 사람들에게 유쾌함을 전달했어요. 다산 활동 중에서 저한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건 수원 촛불인데, 문화제 형식을 취해서 사람들과의 힘을 모아내고 하는데 거기서도 어떤 코미디를 패러디해서 사회문제를 풍자해 내기도 했어요. 지역사회 내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그런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나 활동가들이 다산에 호감을 갖게 하는 기제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산은 유쾌하다, 운동이 무겁게만 보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산다움이라고 제 스스로……”(썸통, 2022)

7) 더 자세한 <다산인권센터>의 활동은 보고서 5. 부록을 참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인권수다방 진행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반대활동 ·국가보안법 폐지, 보안수사대 해체 대응활동 ·평택평화지킴이 활동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용산참사 진상조사단, 대책위 ·쌍용자동차지원대책위 ·용산참사 범국민장 ·야간시간 집회제한 집시법 개정안 반대활동 ·불심검문 행동 ·노숙소녀 살해사건 검·경 살인누명 규탄 및 형집행정지 촉구 행동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연구프로젝트 ·수원지역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확산 ·밀양 765kV 송전탑 피해지역 인권침해 실태조사 진행 ·밀양인권침해 보고회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보고회 ·철도노조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 ·삼성전자서비스 아산센터 경찰폭력 진상조사단 참여 ·밀양 인권침해 감시활동 ·군대내 집단 따돌림 사건 피해자 지원 ·국정원 파헤치기 강좌 & 국정원 규탄 나들이 ·평택쌍용자동차 인권침해 감시단활동 ·공권력 감시 대응팀 활동: 고 백남기 농민 ·민중총결기 국가폭력 조사단 보고대회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NGO 보고서 작성 ·양심수 석방 대책위의 공동집행위원활동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정보경찰폐지 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 활동 ·경기도 자치경찰제의 현주소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콜로키움
<p style="text-align: center;">노동인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노총수원지구협의회와 최저임금위반 감시활동 ·공무원노조 릴레이단식농성 ·삼성경기공대위 활동 ·경기비정규연대회의 ·삼성X파일 철저수사와 노동관련사건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세콤 에스원 연대 활동 ·삼성공동투쟁단 ·삼성 에버랜드 공대위 ·경기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해고 철회 대책위 ·삼성공동투쟁단&삼성반도체 사업부 집단백혈병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경기이주공대위 활동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조사단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주간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현대차 비정규직 인권탄압 진상조사 ·아주대 시설관리노동자 권리찾기 지원단 ·노동인권 벚بار리들과 모임 - 노인정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관련 내부지침 문제 제기 집회와 대응활동 ·SJM 용역폭력사건 대응 ·쌍차 송전탑 농성장 지원 ·반올림 직업병 피해자 문화제 ·쌍차해고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구성 ·경진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삼성반도체 화성공장 불산누출사고 공대위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노조탄압 분쇄와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경기지역 공대위 ·삼성을 말한다 워크샵.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출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건 대응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 집단폐사 민관합동대책단 보고대회 ·유해물질 알권리모임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 농성 ·고 황유미 10주기 및 삼성전자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집중행동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삼성부당해고자 김용희님께 정의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과의 연대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1인 시위
반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신고복지시설 실태조사활동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 ·화성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대책위 ·혐오로 혐오를 덮는 사회, 안전할 권리를 묻는다 토론회: 강남역 살인사건 ·가해자에게 질문하지 않는 사회: 안희정 1심 판결에 부쳐 토론회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관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성차별없는 세상을 열어젖히는 수원시민 이어말하기 ·지방선거 혐오대응 네트워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연대활동 ·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행동 ·혐오하는 사회, 집회하는 소수자를 위한 가이드북 발간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공동행동 ·성평등 짜란다짤한다 프로젝트 ·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N번방 통한 성착취 사건 엄중처벌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세월호 및 코로나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원역 시민분향소 설치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책회의 참가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운동 ·416연대와 세월호 유가족 도보행진 ·416인권선언운동과 인권실태조사 작업 ·416인권선언 풀뿌리 토론 ·안전과 존엄에 관한 416인권선언 활동 ·세월호 참사 시민분향소 운영 및 2주기 행사 참여 ·세월호 참사 수원시민 공동행동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코로나19 의료공백실태조사단 ·코로나19 집담회 ·이주민 코로나19 전수조사 행정명령 비판 ·경기도 코로나19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약자(노숙인, 이주노동자) 경험분석 인권보고서 발간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이슈보고서 발간
기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4.22 지구의 날 직접행동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권정책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화 저지활동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가) ·수원시인권위원회 활동 ·인권교육네트워크와 함께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관련 간담회 준비 및 인권교육 관련 쟁점 토론 ·적당히와 나중으로 점철되어 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인권교육/ 청소년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대상 노동인권교육 ·금속노조와 인권교육 진행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교육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인권교재모임 ·금속노조경기지부 교육선전담당자 인권교육 ·SJM 조합원 대상 노동인권교육 ·청소년인권토론회 ·청소년모의법정대본 공모 ·인권교육 디딤돌 워크샵 개최 ·정신보건센터 사진교육 및 인권교육 ·청소년인권학교(5회) 천기누설 ·학교인권교육팀 ·인권교육팀을 프로그램개발/정리팀, 청소년인권교육팀, 정신장애인인권교육팀, 세 팀으로 개편(2008년 3월) ·제 1회 인권캠프 ‘2박3일’ ·학생인권 실태조사 진행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학생참여기획단 공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 ·정신장애인 인권교육 ·중학생인권교재/ 청소년권리교재 ·별점제 폐지, 강제전학/학교서열화 반대 수원망포고 강제전출 폐지를 위한 학생인권모임 ·학생인권네트워크(2012년 9월 첫모임)의 ‘인권친화적 학교+_너머를 만드는 10가지 약속 캠페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1주년 사업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학교(학생, 교사) 인권교육 폭주 ·청소년인권 아카데미 ·전문계고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인권교육 수다마당 ·인권교육센터 독립준비 ·인권교육 온다(준) 창립식(2013년 10월 25일) ·인권교육활동가 입문과정 후속모임 ‘텃밭’ 스터디 ·폭력에 반하다 워크샵 참여 ·청년인권기자단 모집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 ·일상을 바꾸는 민주시민교육 포럼
인권포럼/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산인권포럼 ·사회권학습회 ·대안세계화: 공동체와 지역운동 ·인권도시 워크숍 ·폐다고지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인문학 특강 ·다산인권공부방 ·인권공부방 ·인권공부방 '봄, 여름, 가을, 겨울' ·벚꽃대선 엔딩말고 비기닝 강좌 ·이슈 수다회
인권영화제/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 인권영화제 ·수원인권영화제 ·한미FTA를 알리기 위한 인권문화활동 ·FTA 반대 길바닥 행동단 ·수원대 인권영화제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문화제 ·인권영화제 반딧불 ·영화소모임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극장 확대 기자회견 ·<금요일에는 돌아오렴> 북콘서트 ·세월호 관련 영화 <나쁜 나라>, <업사이드 다운> 공동체 상영 ·공동체상영 <런던프라이드> ·공동상영회 <공범자들> ·DMZ 영화제 10월 지역상영회 <카운터스> 등 ·오렌지인권상 제정 & 오렌지가 좋아 추모문화제
인권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희망김장과 함께 한 인터뷰 프로젝트 ·재난참사기록모임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이주민 생애구술사 <담> 프로젝트 ·수원 4.16운동 기록과 행동
지역현안대응/ 지역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H고교 교사의 여학생 성폭행 사건 ·여중생 미군 장갑차 사망사고 경기도 시국기자회견 및 남문집회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원감시단 활동 ·수원촛불기획단 활동 시작/ 수원시민대책회의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반대 범시민대책위활동 ·수원촛불에서 막돼먹은 뉴스 코너 진행 ·지역운동포럼에서 주민운동 사례나누기 워크숍 ·참여예산네트워크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활동 ·2012년 411총선대응 김진표, 남경필 낙선운동 ·2016년 413총선대응 수원의 막돼먹은 친구를 소개합니다 ·생명/평화/인권/민주주의를 위한 수원공동행동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 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 생명평화회의 ·수원축볼 리부트 ·2018수원지역운동포럼: 만남, 상상, 연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드컵 아동노동착취반대 캠페인 ·G20 대응방안 논의 ·전국 인권활동가 대회 준비/참여 ·이라크파병반대사업 ·북인권을 둘러싼 국내외 움직임에 대한 한반도 인권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반전평화팀 ·세계인권선언 70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나눔의 집 사태 해결을 위한 후속대응 ·망글라바 미얀마 온라인 연속기고

의제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다산인권센터> 활동의 특징에서 다루겠지만, 인권운동과 지역운동이 의제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은 전형적인 구분이다. 그렇지만 지역운동이 단지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전개되는 운동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시민사회를 재조직하는 운동이자 주민들이 스스로 운동의 주체로 등장하는 운동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위의 구분은 조정될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같은 전국적인 의제도 지역운동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고, 노동인권 관련 의제나 인권교육이나 소모임도 지역운동의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동안 <다산인권센터>가 개입해 온 사안들은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들이었고, 그런 사안들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조직의 운영이나 특성과 무관할 수 없다.

3. <다산인권센터>는 어떤 단체였나?

‘벗바리’라 불리는 수백 명의 회원들이 있지만, 회원 중심의 운동단체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다산인권센터>의 정리된 자료들은 많지 않다. 그리고 이렇듯 제한된 자료를 통해 <다산인권센터>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통해 파악된 특징들을 정리하며 얻게 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의 운영이나 활동에 대한 평가보다는 경향성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1) <다산인권센터> 조직운영의 특징

(1) 의사결정구조의 평등과 지속가능성

<다산인권센터>는 센터로의 전환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장직과 호봉체계를 없애고 활동가들이 센터를 평등하게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다산인권센터>의 활동내규(2020년 4월 20일 개정판)를 보면, 제 3조(정의)에서 상임활동가는 “본 센터의 인권운동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대표하며 활동비를 지급받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6조 (의사결정)은 “상임활동가는 모든 직무 및 활동에 대해 민주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임활동가들이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주간회의와 매월 두 번째 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월간회의를 통해 주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각종 회의 소집과 진행, 현안 논의, 긴급한 처리 사안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는 집행조정자는 상임활동가 전원회의를 통해 선임되고 1년 동안 책임을 가진다. 벵바리(후원회원), 자원활동가, 운영위원이 있지만 센터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한해 사업에 대한 평가나 다음 해 사업에 대한 계획도 활동가들이 결정한다.

이런 운영구조는 분명한 장단점을 가진다. 장점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불리는 내부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나 사무총장/사무처장을 두지 않고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수평적인 구조는 단체 내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물론 대표체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표의 선출과정이나 의사소통/결정, 정보의 공유 같은 과정들이 세밀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계구조가 되기 쉽기 때문이다. 수평체계는 활동가들이 다른 단위에서 기획된 사업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가들의 만족도가 높고 내부의 불화가 없을 경우 단체운영이 안정적이다.

그리고 활동가들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다산인권센터>가 다양한 연대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체계 덕분이기도 하다. 활동가들의 특성과 의지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추진력 있게 사업을 밀고 갈 수 있다. 지역단체들이 연대활동에서 <다산인권센터>의 활동력을 높게 평가한 것은 이와도 연관이 있다.

또한 사업을 통해 활동가의 역량이 성장할 수 있다. 활동가가 사업의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통한 네트워크와 역량이 축적되고, 이것이 이후의 다른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활동가가 자기 사업을 가지고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반면에 수평적인 운영구조가 가지는 장점은 내부의 효과적인 운영과정이 있을 때 유지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단점으로 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단체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오래된 활동가와 신입 활동가의 역량차이는 불가피한 일이다. 경력이 오래된 활동가의 경우 사안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연대단위를 구성할 네트워크나 기술, 경험이 풍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정보와 기술, 경험의 격차는 보통 활동가의 능력차이로 해석되어 단체 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편차를 조율해주

는 장치가 없을 경우 특정 개인이 단체를 과잉 대표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단체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가 단체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한국사회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센터에는 대표가 없지만 다른 단체들에는 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특정인을 대표격으로 여기게 된다. 존재의 평등이 능력의 평등을 보장하지도 않고, 꼭 능력이 평등해야 할 이유도 없다.

물론 이점을 무조건 단점으로 여길 수는 없다. 활동가들의 관심과 활동력에서 편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이가 없다.’고 하는 말이 ‘어떤 위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즉 평등한 질서에도 편차를 조율할 장치가 필요하다. 의사결정구조의 평등이 수평구조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자동적으로 해결해주는 못하고, 활동가 개인이 자력으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 평등은 좋은 말이지만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적용되면 기계적인 평등이란 지적을 받는다. 가령, 신입 활동가가 단체에 들어올 경우 그 사람에게에는 이 단체의 목적과 방식,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배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산인권센터> 활동내규에는 수습활동가의 활동비와 대우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내부 교육 혹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은 없다. 활동가세미나가 있지만 이런 과정이 일방적인 학습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도 있다. 활동경험과 자신감, 네트워크를 채울 과정이 존재하고 그것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과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그동안 <다산인권센터>는 센터에 들어오기 전 활동가 개개인이 갖고 있던 활동 역량을 기본으로 상정하고⁸⁾ 현장경험과 기본학습을 통해 스스로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 표준화된 프로그램보다는 사람에 맞춰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활동가들 역시 이런 방식의 역량강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⁹⁾

표준화된 프로그램과 자발적인 역량강화방식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의사결정구조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고민하는 것은 활동가의 역량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절히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단점으로 활동가들의 결정이 단체의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사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 그것을 회의와 같은 과정으로 만들 수 있지만 주간회의나 월간회의 같은 장치가 정례화 될 뿐 아니라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의는 진행되는 사안에 대한 공유와 확인 정도로 진행될 수 있다. 자율성에 대한 존중만큼 회의에서 소통되어야 할 사안과 함께 결정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구분과 확인이 필요하다.

8) “……사람들을 내쳐서는 사실은 지역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국민의 힘>도 만나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운동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은 사월만 해도 좀 달랐죠. 뭔가 훈련 과정을 거치고 우리한테 왔던 친구는 아니었고, 전형적인 선한 의지를 갖고 운동에 함께하고 싶었던 20대였기 때문에 좀 달랐는데, 다른 다산 활동가들은 대부분 그런 과정으로 단련이 됐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이 의제를 가지고 길게 논의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 의제를 치고 나가서 달려가면서……”(박진, 2022)

9) “다산 처음 들어왔을 때 뭔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다산의 구체적인 역사를 소개해준다면 활동에 필요한 뭔가를 알려준다던지 하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랄라, 2022)

예를 들어, <다산인권센터>의 활동가가 내부 논의를 거스른 채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위원으로 참여한 사례는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기본 정체성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별 활동가의 참여였지만 외부에 단체를 대표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체의 합의된 결정으로 이루어졌어야 옳았다. 개인 활동가의 판단과 결심이 조직의 판단과 결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다산인권센터>의 향후 활동을 고려한다면 평등한 의사결정구조의 장점을 유지하되 새로운 활동의 지속을 위해 적절한 내부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이후의 제안에서 다시 다루겠다.

(2) 조직의 분립과 인권의 확장성

활동조직의 분화는 단순히 조직구조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운동의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관련한 새로운 활동가들을 양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조직이면서 담당 활동가가 그 사업영역을 대표하는 구조인 <<다산인권센터>>는 필요에 따라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유연성과 배포를 가지고 단체를 운영해왔다. <다산인권센터> 자체가 <법무법인 다산>과의 분립과정에서 탄생했고, 그 이후 <다산인권센터>에서 분리되거나 창립의 씨앗이 되었던 단체로, <경기복지시민연대>, <인권재단 사람>, <반올림>, <인권교육 온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있다.

가장 먼저 독립한 <경기복지시민연대>의 경우 노인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데, 에바다농아원 사건, IMF 외환위기 때 드러난 사회안전망의 총체적 부실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생존권, 복지운동의 관점에서 단체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다산인권상담소>가 하던 복지쪽 사업이 전문화되었다. 조직적인 면을 보면 당시 <다산인권상담소> 소장이었던 김철준 변호사가 <경기복지시민연대> 준비위원회에 참여했고, 송원찬 활동가가 이후 자리를 옮겼다. 그러면서 <다산인권센터>의 사업영역에서 노인과 관련된 부분은 사라졌지만 다른 사업들로 사회권 영역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인권재단 사람>은 2004년 9월 <다산인권재단 사람>으로 출발했고 2006년에 명칭을 현재의 것으로 바꿨다. 그리고 삼성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던 <다산인권센터>가 <민주노동 경기법률원> 등과 삼성백혈병진상규명대책위 제안서를 여러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에 돌렸고 2007년 11월에 <반올림>이 창립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인권교육의 수요가 늘어나자 2013년 10월에 <인권교육 온다>가 창립했다. 2013년 12월에는 삼성의 노동인권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출범하는데 힘을 보탰다. 박진 활동가는 이슈파이팅과 교육이 서로 부딪치는 면이 있고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단체를 독립시켰다고 이야기한다.¹⁰⁾ 이런 과정을 인큐베이팅 과정이라 볼 수 있지만 그

10) “사회복지 전문운동단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경기복지시민연대>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기존에 <다산인권센터>가 하던 ‘사회복지사업’을 경기복지가 가져간 거지 <다산인권센터>가 하던 ‘사회권 사업’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뭐 노동권 관련 활동도 사회권운동이고……또 사회권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한

과정은 다르다고 판단된다. 인큐베이팅은 의도적으로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내부에서 사업영역과 인력을 육성하는 과정인데, <다산인권센터>는 애초에 분리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다 필요에 따라 분화시켰기 때문이다.

관건은 조직분화 이후 단체 간의 관계와 사업영역의 조정이다.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단체 분립 이후에도 분립된 단체와 <다산인권센터>의 관계는 긍정적이고 사업영역도 적절히 조절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경기복지시민연대>나 <반올림>의 분립 이후에도 연대사업은 계속 이어졌고, <인권교육 온다>와도 인권교육과 관련된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한 단체가 계속 사업영역을 넓히면서 큰 단체가 되는 것보다 이렇게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확보할 정도로 운동이 성장하면 분리하는 방식이 더 좋은 방향이라 볼 수 있다. 그래야 사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구조도 단순해지고 그러면서 활동력도 강해지고 의제도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단체의 경우 다양한 요구를 받기 때문에 활동영역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다산인권센터>가 분립의 원칙을 세운 건 의제확장을 조직구조를 통해 고민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비슷하게 <인권운동사랑방>도 2006년 <인권연구소 창>, 2008년 <인권교육센터 들>, 2013년 <서울인권영화제>를 분리·독립시켰다. <인권운동사랑방>의 경우 설립당시부터 인권운동의 전문화를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며, 각 영역별 성장에 따른 별도의 단체 설립/독립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산인권센터와 차이점을 갖는다. 하지만 두 단체에서 이런 분립의 방식이 인권운동에서 가능했던 것은 수평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활동가들 각자가 담당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을 전담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분립하는 것은 인권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분립의 경우 초기의 역사성을 아는 활동가와 분립 이후 결합한 활동가의 네트워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모 단체와 분리단체의 관계는 공식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인권운동의 확산전략으로서 분립을 택한 것이라면 그 관계설정에도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 하나 단체의 분립을 고민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재정이다. 홀로 자립하기 어려운 단체를 무조건 만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분립과정에서 일정 정도 회원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기존 단체의 재정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창립을 위한 별도의 행사를 많이 열지만, 이런 특별 행사가 일상 재정을 책임지진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이

개입 가운데서 ‘저건 경기북지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 이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회복지운동이 다 인권운동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복지 역량은 <다산인권센터>에서 독립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인권교육단체 <온다>도 독립시켰어요. 인권교육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이슈파이팅하고 교육이 같이 묶여 있다 보니 서로 발목을 잡는 게 있는 거예요. 상생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그래도 전문적으로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 분리시킨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권교육 온다>와 함께 이슈파이팅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인권교육 온다>랑 협력적으로 이슈파이팅을 하고 있어요.”(박진, 2017)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분립 이후의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제안은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담기로 한다.

(3) 재정과 운영의 분리

1996년 6월 17일에 발행된 《다산인권》 제 2호에는 제 1호에 없던 회원모집 광고가 실린다. “다산 인권상담소의 활동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의 혜택은 “인권상담소 진행하는 행사는 물론 지역 내의 각종 교육, 문화 행사 일정 및 정보 일체 제공, 각종 법률(일반 민·형사/노동사건) 무료상담 및 자문, 다산인권 소식지 및 인권, 법률관련 자료 무료우송”이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광고가 적극적으로 실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회원모집이 절실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

<다산인권센터>가 본격적으로 회원모집을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로 <범무법인 다산>의 재정 지원이 일부 줄어들면서부터다. 2007년 《몸살》 2월호는 ‘벗바리(순수 우리말로 ‘결에서 도와주는 사람 또는 친구’란 의미) 모집을 광고하며 “벗바리는 단순한 재정적인 후원뿐만이 아니라 활동의 장소에서 <다산인권센터>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실었다. 그동안의 소식지가 일 방향으로 활동소식을 전했던 것이라면, 2007년 《몸살》 4월호에는 회원 OX퀴즈가 소식지에 등장한다. 회원들이 실제로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회원들과의 기본적인 쌍방향 소통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과의 소식을 소소하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식지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활동소식과 재정상황 공유이다. 재정적인 이유로 벗바리 모집을 시작했지만 결산보고가 소식지에 실리기 시작한 시점은 2009년 《몸살》 6월호부터이다. 결산보고이지만 이 당시는 정식회계로 보기 어렵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아주 간단한 정리였다. 소식지에 실린 회계를 보면, 수입은 <범무법인 다산> 후원금 3백만 원, 이월금 약 1백 만 원, 벗바리후원금 약 2백 만 원, 기타수입 등으로 총 6백5십 만 원 가량이다. 지출은 사업비 1백 만 원, 운영비 약 5백 만 원(상근비 3백 만 원 포함) 총 6백 만 원 가량이다. 이 때 일반회계로 사용하는 신한통장 외에 농협통장이 있고 농협통장에 이월금 약 2백8십 만 원, 벗바리후원금 1십1 만 원 등이 잡혀 잔액은 총 3백 만 원 가량이었다. 통장이 두 개로 관리되고 있고 회계 상의 명목들이 잘 정리되지 않고 있지만 회원들의 후원규모는 약 3백 만 원으로 활동가들의 활동비를 책임지는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수입과 지출 규모가 비슷한 빠듯한 살림이었다.

2013년 《몸살》 3월호부터 수입과 지출이 체계적으로 구분된다. 수입이 경상수입, 사업수입, 기타수입으로 정리되고 지출은 운영비(경상운영비, 일반운영비), 인건비(급여, 복리후생비), 사업비(경상사업비, 일반사업비, 연대사업비)로 구분되었다. 2013년 1월수입은 총 약 1천5백 만 원, 지출은 총 1천1백 만 원 정도였다. 전월 이월된 금액과 특별후원 금액

을 빼면 CMS후원과 자동이체후원 규모는 4백5십 만 원 가량이다. 상근/반상근활동가 활동비가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지만 회원들의 회비로는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법무법인 다산>의 매월 후원금 3백만 원은 주요한 재원이다. 2013년 10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 벚바리(후원회원)들과 밥을 먹는 자리도 만들어졌고, 격월간 《몸살》이 월간으로, 온라인 발행으로 전환되었다.

8년 가량 지난 2021년 《몸살》 가을호(7~9월호)를 보면, 3개월간 총 수입은 약 3천7백 만 원, 총 지출 3천9백 만 원으로 적자 재정이다. 3분기 후원수입은 약 3천7백 만 원, CMS후원과 자동이체 후원은 약 2천2백 만 원으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합친 약 2천2백 만 원과 차이가 없다. 여기에 경상운영비인 일반관리비를 더하면 약 2천4백 만 원으로 정기적인 회원수입으로는 단체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그나마 2분기(4~6월)의 일시 후원금이 약 4천7백 만 원이어서 적자 재정을 메울 수 있었고, 1분기도 후원수입으로는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이다.

	수입항목의 변화	지출항목의 변화
2009년 6월	후원금 46% 이월금 15% 벚바리후원금 30% 기타수입 9%	사업비 16% 운영비 84%
2021년 7~9월	후원수입(CMS, 자동이체, 특별, 일시) 91%	운영비(일반관리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62%
	사업수입(교육, 후원, 사업지원금, 사업분담금) 4%	사업비(교육사업비, 연대사업비, 조직역량 강화사업비, 지원사업비, 현안대응사업, 회원사업, 후원사업) 35%
	기타수입 5%	기금 3%

표에서 보이듯 전체 예산에서 운영비 비중은 줄었지만 수입을 전적으로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단체운영이 가능한 단체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래서 정부나 민간재단의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다산인권센터>는 회원증가를 통해 재정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려 노력해 왔지만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도 꾸준히 증가해왔기 때문에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2021년에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기도 했다. 애초 첫 총회는 2020년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한해 연기돼 2021년에 열렸다. 2021년 3월 정기총회에서는 <다산인권센터>는 정관을 개정해 비영리민간단체와 기부금대상단체 등록을 준비하고 있고 독립건물을 마련할 준비도 하고 있다. 또한 2021년 5월부터는 회원들과 함께 단체를 홍보할 ‘다홍크루’도 결성해서 시민들에게 인권을 친근하고 쉽게 알

릴 카드뉴스 제작도 도모한 바 있다.

지역인권단체로의 정체성은 회원참여와도 일정 정도 맞물려 있고, 회원들은 단체의 재정만이 아니라 활동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다산인권센터>도 조금씩 회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넓혀왔지만 활동가 중심의 활동체계는 기획된 사업의 참여로 제한하는 면이 있다. 그리고 회원들의 관심이 떨어질 경우 경기가 침체되면 탈퇴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위기가 운영위기를 부를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로의 단체성격 변화는 신규 회원의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활동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로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 내 단체로의 변화는 그동안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기에 분명한 장단점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 제안에서 간략히 다루려 한다.

2) <다산인권센터> 활동의 특징

(1) 노동인권과 사회권

<다산인권상담소> 시절부터 노동인권은 센터의 주요한 의제였다. 해고노동자나 산업재해,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이나 노동조합 교육이 주요한 활동이었고,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단단했다. 한국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발전이 분리되어 발전했다면, 인권운동은 사회권을 통해 노동과 자본주의 문제에 계속 개입했다.¹¹⁾

<다산인권상담소>는 노동운동 출신 활동가들이 있었고 김철준 변호사의 송무지원도 담당했기 때문에 노동의제의 활동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다산인권센터>의 주요 활동의제에서도 사회권의 비중이 많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사안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2003년부터 삼성그룹 노동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다산인권센터>의 활동에서 사회권이 두드러졌고, 비정규직 문제나 청소년노동자, 이주노동자 문제가 계속 다루어졌다. 그리고 2009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그렇다면 <다산인권센터>가 생각하는 노동인권은 무엇일까? 노동인권이라는 개념을 센터가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다. 박진 활동가는 2000년대 초반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을 하면서 노동인권이라는 말을 썼고, 지역운동포럼에서 노조운동가들과 함께하면서 본격적으로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한다.¹²⁾ 그렇지만 이때부터 노동인권이

11) 정정훈은 이를 '2세대 인권운동'이라 부르며 민주화운동이나 변혁운동의 부문운동 성격이 강했던 '1세대 인권운동'과 달리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사회운동을 고민하되, 기존 변혁운동의 관성으로부터는 벗어나는 방식"을 모색하는 맥락에서 출현했다고 본다. 정정훈은 "<다산인권센터>는 초기서부터 노동운동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고 이러한 활동방식은 이후 <다산인권센터>의 역사를 관통하는 경향이 되었다."고 평가한다(정정훈, 2020: 89; 92).

12) "2000년 초반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을 하면서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때 노동인권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용어를 공식화해서 쓰기 시작한 것은 지역운동포럼에서 '노동운동 지역에서 길을 묻다'라는 기획으로 노조운동하시는 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였어요. 현재의 노동운동만으로는 노동권을 보장받기 어렵고, 그렇다면 어떤 문제의식을 더 가질 것인가를 고민했던 거죠. 여기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삼성노동권운동이었어요."(박진, 2017)

명확하게 정의되어 사용된 것 같지는 않다.

2011년에 <다산인권센터> 노동인권교육팀은 금속노동 노동인권교재인 『노동자 이교대씨의 생존기』를 작성했다. 안은정, 박진, 안병주, 김산 활동가가 만든 이 교재는 노동인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존의 노동권은 노동법, 노동3권, 임금노동 등으로 일자리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만으로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 모두를 볼 수 없었습니다. 현장 안에서는 노동법의 보호조차 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이 늘어갑니다. 현장 밖의 노동자들은 시민으로, 소비자로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노동인권은 노동권을 넘는 다양한 인권과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일자리 불안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다른 이야기일까요?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숨겨진 문제들이 나와 먼 타인의 이야기일까요? 할인마트에서,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자집에서, 주유소에서 만나는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는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외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외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일까요? 핵발전소가 붕괴될 때 가장 먼저 죽어야했던 원전 집시들의 이야기는 일본의 이야기일 뿐일까요?”(다산인권센터 노동교육팀, 2011)

생활 곳곳에서 맞닥뜨리는 노동조건, 노동자의 상황을 인권과 연결 짓는 이 교재에서 “노동권을 무시하거나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의 권리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는 노동권과 인권의 접목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약화된 노동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노동의제에 지역성을 결합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인식은 박진 활동가의 인터뷰에서도 엿볼 수 있다.

“노동운동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사회운동 전반, 지역운동 전반 등의 자원과의 연결이 되어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노동운동이 약하죠. 그런 자원과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인권단체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 전부터 생긴 고민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공장 담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이 어떻게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안산에 ‘노동자 공제회’같은 사례가 있어요. 공단 조직화가 잘 안 되는 곳에서 오히려 시민으로서, 시민으로의 노동자, 그들의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공제회를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공장 안의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퇴근만 하면 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조끼만 입으면 시민임을 까먹어요. 밖에 있는 시민들도 자신이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이 간극들을 좁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박진, 2017)

2012년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와 함께 희망김장기획단을 만들고 김치통을 들고 경기남부지역 장기투쟁 노동자들을 만났던 『사람꽃을 만나다』 사업도 비슷한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노동운동의 적극적인 연대세력으로 시민들을 조직하는 것, 이것은 별도의 연대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각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자신의 시민성을 각성한 노동자, 자신의 노동자성을 각성한 시민들이 만나 변화를 모색하는데, 그 방향은 무엇이어야 할까? 노동인권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 걸까? 시민성과 노동권이 충돌하는 지점은 없을까? 이런 부분은 노동인권 개념만으로 명확하게 설명되긴 어렵고 지역인권 개념을 통해 더욱더 구체적인 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

<다산인권센터>는 삼성 노동권 투쟁을 비롯한 노동현안들이 우리 일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드러내며 노동인권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경기지부와 여러 사업들을 통해 실천적인 방향도 조직했다. 그런 점에서 노동인권은 <다산인권센터>의 활동에서 두드러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을 제외하면 노동 현안에 대응할 시민사회단체가 거의 없는 한국사회에서 이것은 소중한 활동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노동인권은 노동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넘어서서 사회 자체가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더욱더 급진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뜻한다. 그렇다면 <다산인권센터>는 이런 지향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구체화시켜 왔는가? 노동운동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사회변혁활동으로 자기 지향을 정립해 왔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지역운동포럼은 이런 고민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장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오고 있다고 평가할만한 자료는 아직 없다.

(2) 인권운동으로서의 연대

<다산인권센터>가 지난 30년 동안 해온 활동의 상당수는 사실상 연대사업이다. 인권운동이 약자의 권리구제와 사회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만큼 이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미리 계획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그때 제기되는 현안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른 시민사회운동이 고유사업을 정하고 기획된 방향으로 일정을 만든다면, 인권운동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사회제도 변화를 목표로 삼기 때문에 연대요청이 많고 관련 사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대사업의 활성화는 <다산인권센터>가 종합적 인권운동단체로서 활동해오면서 광범위한 인권의제를 다루고 있으며, 지역단체로서의 유연성과 기동성을 갖고 있다는 특성에 기인하기도 한다. 또한 이는 <다산인권센터>의 활동가 중심 체계에서 비롯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주간회의나 월간회의를 통해 단체의 활동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활동가 개개인이 관심을 가진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단체의 경우 연대 단위에 참석한 활동가가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성이 제한된 반면, <다산인권센터>의 경우 활동가의 판단과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원지역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런 점이 드러난다.¹³⁾

13) 이기원(수원여성회 대표)은 이렇게 말한다. “최근에 각종 연대회의에 나가면서 <다산인권센터>가 갖고 있는

이것은 기존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운동문화에서 탈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 시민사회 연대문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연대회의의 20주년을 분석한 보고서는 사회적 의제화 방식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20년간 유지되어 온 연대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는 비단 연대회의의 의사결정 구조만의 고민이 아니라 시민단체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공통의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연대회의의 기존 사회적 의제화 방식을 유지 하더라도 아래로부터 젊은 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위원회 구조를 통해 새로운 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2021)

그렇지만 연대사업이 많아질수록 단체의 정체성을 반영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어렵고 연대사업의 경우 여러 단체들이 함께 진행하기에 우리의 성과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다.¹⁴⁾ 그런 점에서 연대사업의 딜레마가 있다. 꼭 필요하지만 그것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럴 때 애기되는 것이 사업의 균형이지만 기계적인 균형점을 미리 잡아 놓지 않는 이상 연대사업의 증가를 막기는 어렵다.¹⁵⁾

장점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어요. 사실 연대사업의 경우 대부분 자기입장이 분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있고, 이만큼 거는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산인권센터>는 항상 분명한 자기입장을 갖고 참여하면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어요. 일이 되게끔 하는데 일조하는 단체가 <다산인권센터>라고 생각해요. 일례로 수원비상시국회의에서 <다산인권센터>의 활동이 그랬어요.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모인 곳이 시국회의였는데, <다산인권센터>가 중심단체로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잘 이끌어왔다고 평가해요.”(다산인권센터, 2003: 34)

14) “이한빛PD 사망사건 대책위에 결합했고, 대책위가 합의를 보는 과정도 있었고, 이 활동을 통해서 방송업계 노동자들 노동현실을 개선하는 과정도 있었고. 반올림도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해왔고, 그 외에도 이기는 싸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의 성과다 하기 보다는 그 운동이 잘 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랄까 그게 이상하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운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 운동이 잘 되는 게 우리의 성과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랄라, 2022)

15) “연말에 평가를 할 때 활동들이 쭉쭉 나열은 되는데 ‘이 활동들이 우리에게 남기는 건 뭘까’ 이런 허전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 활동가 모두가 공감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산의 모든 활동가들이 함께 집중해서, 다산의 이름으로 활동을 해보자라는 문제 제기가 최근 몇 년간 있었죠. 그런 문제의식들이 모여 지난 2년,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그런 활동을 의식적으로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다산 혼자 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대 활동을 많이 했고, 하다 보면 그 활동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긴 한데, 다산이 다른 단체들의 역할을 잡고 가는 케이스들도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 지금도 연대 활동하는 것 중에서 만약에 다산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활동 자체가 멈추게 되는 것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연대 활동에서 어떤 운동의 성과가 났을 데 그것이 오롯이 다산의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한 부분이 있는 거죠.”(아샤, 2022):

“다산의 활동과 사업 방식이 모든 활동가가 다 같이 집중 형태의 방식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이지만 약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활동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 역량이 많이 발휘되어지는, 한 단체에 있지만 한 사람이 1인 1단체처럼 활동하는 그런 형태들이 좀 많아 왔고. 최근 들어서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긴 해요. 어떤 운동에 한 명의 활동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활동가가 참여해서 그 운동이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집중해 보자는 논의도 진행하고 있고. 활동방식 고민도 더 갖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방향을 갖기도 하고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기획을 해서 같이 집중을 하자라든가 모든 활동가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달라붙어서 같이 집중하는 그런 거는 다산의 활동 모습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쌤통, 2022):

“그리고 지역에서의 한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산이 활동을 할 때 독자적으로 하기보다 늘 먼저 어디에 전화해서 우리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게 지역 운동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다산이 지역에서 의제를 제기해주면 지역 단

나아가 연대사업의 증가는 단체의 운동전략에 대한 고민을 낳는다. <다산인권센터>는 어떤 사회변화의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많은 연대사업들이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반대나 저항 외에 어떤 방향으로의 건설과 창조에 관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어렵다. 그리고 단체 활동을 잘 알지 못하는 회원들은 활동에는 공감하지만 활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

더구나 하나의 사안이 마무리되지 않고 연대사업의 가짓수가 계속 늘어날 경우 활동가가 소진되거나 단체의 일상 업무가 마비될 수도 있다. 다산의 경우 상시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간/월간회의를 통해 업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20주년을 맞이한 설문조사에서 회원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답변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응답자 중 다수(59%)는 '지역사회 인권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가장 좋았다'고 답했고, 19명(17%)이 '언론매체 등에서 활동관련 소식을 들을 때가 좋았다'고 답했는데, 아쉬운 점에 대한 물음에서는 '다산이 다양한 시민참여를 통한 대안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몇몇 응답자들은 노동인권이나 연대활동의 성과도 있지만 이슈 중심 인권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다산인권센터>에 대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의 우호적인 평가는 부록으로 담긴 활동기록의 반영이다. 매일 인권을 침해하는 현안들이 터지는 한국사회에서 <다산인권센터>는 좋은 비빌 언덕이 되어 왔다. 물론 그 언덕을 계속 다지고 유지하는 것은 과제이다.

(3) 지역인권운동에 대한 고민

20주년을 맞아 실시한 회원과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다산인권센터>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인권문제를 풀어나가는 풀뿌리 주민운동'을 가장 시급한 활동으로 꼽았다. 그 다음이 ▲'회원 참여에 기반을 둔 대중적 운동 기획',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대중적 운동 기획',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인권정책 마련', ▲'전문성 강화' 등이다.¹⁶⁾ 사실 <다산인권센터>는 시작부터 지역인권운동의 정체성을 표방했다. 김철준 변호사의 고민도 지역에 맞춰져 있었고¹⁷⁾, 활동가들도 지역인권운동단체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¹⁸⁾

체들이 모이면서 운동이 만들어지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런 과정이 다산의 운동의 성과라고 생각해요. 수원 촛불을 우리가 좋게 기억하는 건 이런 성과 중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단체들이 다산에 기대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아 다산은 이런데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왔고, 이런 과정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걸 한 줄로 다산의 성과라고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왔던 과정들이 우리에게 운동의 성과라는 생각이 들어요.”(랄라, 2022)

16) '<다산인권센터> 창립 20주년 회원 및 시민 설문조사'. (다산인권센터, 2012: 34~35)

17) 김철준 변호사는 “당시 우리는 두 가지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노동인권관련 상담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지역 노동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93년에 인권상담소를 개소하게 된 거죠.”라고 말했다.(다산인권센터, 2003: 9)

18) 송원찬 활동가는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의 인권현안이 서울 중심의 논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인권운동단체로서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고민이 들고요. 서울중심의 논의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지역인권운동단체들과 고민을 나누고 함께 전망을 찾아가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다산인권센터, 2003: 29)

그렇다면 <다산인권센터>의 지역운동 방향과 방법은 무엇일까? 지역 정체성은 기존의 변혁운동과 달리 변화의 힘을 구체적인 사람에게 끌어내겠다는 방향이고, 그러려면 사람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일찌감치 지역인권운동으로의 방향을 설정한 것과 달리 <다산인권센터>의 초기 활동에서 그런 장치들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다산인권센터>의 일상적인 활동에도 지역운동의 정체성이 있었지만 그런 정체성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활동은 이후의 ‘수원촛불’과 ‘지역운동포럼’으로 볼 수 있다. 수원촛불의 열기를 이어받은 2009년의 ‘지역운동포럼 제안문’은 이런 고민을 담고 있다.

“지역으로 눈을 돌려 보면, 수원촛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지역실천의 핵심으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촛불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활동가, 시민들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나름의 주체들을 조직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양한 지역주체들과의 관계형성, 주체발굴을 통해서 지역운동의 큰 흐름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급진적인 대안이 부재한 대중운동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폭넓게 퍼져 있는 반이명박 정서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재조직하느냐가 우리에게 남겨진 당면 과제일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재구성’을 어떤 내용과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공동의 과제와 실천은 어떤 것인지, 지역운동의 비전과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2009 지역운동포럼 in 수원 조직위원회, 2009: 115)

그러면서 이 제안문은 지역운동포럼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2009지역운동포럼 in 수원 조직위원회, 2009: 116).

- 지역촛불의 성과를 중장기적 지역사회의 진보적 재구성 전략의 정치적 방향과 내용으로 수렴하기 위한 과정
- 관성화 된 지역(연대)운동의 새로운 기운(의제, 실천, 소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정
- 개별화되고 관료화된 의제별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나아가 지역운동의 통합적, 의제별 자기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
- 주민운동 등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광범위하게 조직하기 위한 과정

지역사회의 진보적 재구성과 이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소통/실천/연대/전망,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조직한다는 방향성 하나하나가 무척 어려운 과제이다. 지역운동포럼은 이런 방향성을 하나씩 잡아간다는 목적으로 운영되었지만 논의된 주제들을 정리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매년 발간된 백서로 어떤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의 논의에서 드러나듯 방향성 설정이 쉽지 않다(2010 지역운동포럼 in 수원 조직위원회, 2010: 85~86).

조건준(금속노조 경기지부 교선부장): “제가 활동하는 곳이 금속노조이기 때문에 제가 전제하는 주체들은 당연히 금속에서 조직된 노동자들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노동자들이 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왜 맨날 투쟁만하면 장기투쟁이 되는가, 왜 10년 동안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들이 있어요. 더 이상 생산라인을 멈추는 파업을 넘어 생산과 지역을 넘나드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운동이라고 했을 때 모호해 보입니다. 수원에서 포럼을 하잖아요. 제가 사는 곳은 일산이고 제가 일하는 곳은 수원이고, 우리 조합원들은 전부 안산, 화성 등에 흩어져 있어요. 다 불일치하는 것입니다. 수원을 포함한 지역운동을 이야기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노동자들의 투쟁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횡단할 수 있는 화두가 무엇이나가 고민입니다.”

청 중: “저는 민주노총 조합원이기도 하지만 쌍용자동차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정규직 노동운동을 해 왔구요. 제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노동조합의 실상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대공장 정규직 중심의 운동을 비판하는데 이 안에는 정파의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정파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운동할 때 정파운동의 한계를 느꼈어요. 어느 토론자리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이야기 안 하십니까. 정파에서 대중들에게 사과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성은 공유된 물리적 공간에서만 비롯되지 않고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형성된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의 진보적 재구성이란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고, 서로가 공유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그런 확인이 잘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전히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좁게 이해되고, 반대로 지역 내의 다양한 노동들은 정규직/비정규직의 틀에 갇혀 있다. 그리고 정파가 드러나고 비판받아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그것이 새로운 연대를 구축하기에 충분한 것인 지도 알 수 없다.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진 만큼 지역성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확장될 수 있고 정체성에 기반을 둔 활동이 다양해진 만큼 새로운 연대의 틀이 필요하다. 명확한 시간의 한계선을 가진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각자의 삶에 대한 점검과 연결지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더 나아간 논의가 필요했고 그런 과정들이 이후에 버려졌다면 수원시나 경기도의 사회운동 판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변화를 감지하기는 어렵다.

당시 지역운동포럼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안병주 활동가는 ‘동네에서 다른 세계를 꿈꾸다!’라는 글에서 그런 감정을 남기기도 했다.

“아직은 딱딱함이 곳곳에 베여있고, 이른바 ‘운동권’의 냄새가 폴폴 풍기는 것을 인정한다. 이른바 ‘선수’들만의 리그라고 폄훼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하지만 우리는 그 ‘선수’들

조차도 다 만나지 못해왔다. 단체에서, 지역에서, 마을에서 동네에서 묵묵히 운동과 삶을 개척하고 있는 그 ‘선수’들을 우리는 더 만나고 싶다. ‘연대는 리얼하게’라는 모토는 그야말로 이런 선수들의 만남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표현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2010 지역운동포럼 in 수원 조지위원회, 2010: 172).

이렇게 보면 지역운동포럼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기보다는 그런 논의를 위한 자리와 틀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지역운동포럼이 계속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시 부활했다가 사라진 것도 그 영향이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다산인권센터>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지역운동포럼은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을 털어놓고 얘기 나눌 수 있었던 주요한 공론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지역운동포럼이 곧 <다산인권센터>는 아니듯이, 지역인권운동이라는 틀을 어떻게 지속해 왔는지, 수원시를 인권도시로 변화시킨다는 전략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 제안에서 다루겠다.

(4) 다양한 학습의 장과 새로운 주체

<다산인권센터>가 많은 역할을 했지만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다양한 형태의 학습/공부모임이다. 사실 <다산인권센터>는 자신의 활동을 점검하고¹⁹⁾, 운동의 방향을 잡기 위한 다양한 모임과 강좌들을 기획했다. 초기의 다산인권포럼에서 사회권학습모임, 불타는 공부방, 대안세계화 공부모임, 인권도시 워크샵, 폐다고지 세미나, 인권인문학 특강, 인권 공부방, 이슈 수다회, 문득 인권 등 다양한 모임들이 진행되었다. 초기의 수원인권영화제도 이런 장으로 볼 수 있고, 공동체 상영 등의 문화활동도 일종의 학습의 장으로 볼 수 있다. 2013년의 다짐을 보면 이런 학습의 장은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운동의 비전이기도 했다.

넷, 인권운동을 넘은 인권운동

- 세계인권선언을 넘은 동네/지역 인권선언(예 : 매교동선언)을 준비합니다.
- 제도화되는 인권의 한계를 인식하고 제도 밖의 인권을 끊임없이 제기하기 위한 활동 기반을 마련합니다.
- 인권이 유행처럼 번지는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개입하며 새로운 의제를 던지고 고민하는 활동을 만들어갑니다.

19) 관련해 송원찬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현재 인권교육이 제대로 뿌리내리기도 전에 인권교육이 흥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인권단체들도 인권교육이 인권운동의 어느 위치에 서있고 그 중요성에 대해 피상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다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현실이 그렇다보니 너무나 인권교육을 외치고 있지만 자칫 인권을 형해화하여 왜곡된 인권의식을 심어주지 않을 까하는 걱정조차 듭니다. 따라서 인권운동단체들이 인권교육에 대한 방향과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권운동으로써의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이 보다 원칙적으로 중요합니다. 현재 인권단체들간의 인권교육네트워크 구성은 이러한 고민과 공론화를 위해 시의적절한 활동이라고 판단되며 기대가 큼니다.”(다산인권센터, 2003: 23)

일곱, 인권담론을 확산하는 인권운동

- 인권운동이론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활동을 쌓아갑니다.
- 보이지 않는 인권의 의제와 주체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활동을 실천합니다.

인권운동을 넘는 인권운동, 인권담론을 확산하는 인권운동은 일방적인 계몽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며 사회와 운동의 경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 즉 <다산인권센터>는 이러한 자리를 통해 당시의 주요한 현안을 다룰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인권의 당사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스스로 주체화되는 과정을 만들었다. 사실 인권운동과 풀뿌리운동의 접목이란 별도의 사업보다 이런 형태로 추진되었을 수 있다.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져 2020년에도 한 달에 한번 인권과 관련된 주제에 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문득, 인권’ 모임도 만들어져서 촉법소년, 코로나19와 일상, 나의 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뉘었다. 다양한 학습모임을 함께 기획하고 참여자들을 조직하고 이후의 활동으로 묶어내는 작업은 가장 난이도가 높으면서도 가장 대중적일 수 있는 조직사업이다.

그런 점에서 조직화를 염두에 둔 기획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공동의 삶의 전망을 세워간다면 활동가의 재생산이라는 어려운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플랫폼이라는 공간이 공허하게 빈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만남이 교차하는 장이 되려면 그 속을 채울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다산인권센터>가 준비했던 다양한 학습의 장들은 수원 지역의 지역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인권 의제를 대중화하며 새로운 활동주체를 발굴하는 주요한 과정이었다. 이것이 <다산인권센터>의 지역인권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 같다.

4. <다산인권센터>에 대한 진단과 제안

1) 인권운동에서의 <다산인권센터>의 역할과 위상

여기서는 앞서 ‘인권운동으로서의 연대’로 살펴본 <다산인권센터>의 활동을 인권운동에서의 <다산인권센터>의 역할과 위상이라는 차원의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려 한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다산인권센터>는 전체 인권운동진영의 연대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화운동, 또는 변혁운동의 부분운동으로서 위치 지어지던 인권운동은 1993년 김영삼 정권의 등장을 전후로 독자적 의제와 운동성을 가진 고유한 운동으로서의 위상을 형성하게 된다.²⁰⁾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각

국면마다 중요한 인권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중운동, 시민운동과 구분되는 인권운동진영 연대체를 형성해 대응해왔다. 그 출발점이 1994년 6월에 출범한 <인권단체협의회>다. <인권단체협의회>에는 9개 인권단체가 참여해 과거청산과 정부 감시, 인권종합센터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인권하루소식》 1994. 6. 20). 이후 인권운동진영의 연대 흐름은 김대중정부 하에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1998. 9월 결성)로 이어진다.

<다산인권센터>는 <인권단체협의회>와 공추위 참여단체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다. 그러나 2001년 12월 말부터 2001년 1월 9일까지 13일간 지속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문제해결 촉구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에 송원찬 활동가가 참여한 것을 기점으로 이후 인권운동 연대체 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다. 2001년 7월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에 적극 개입할 것을 선언하며 발족한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에 참여단체로 이름을 올리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2003년에는 연대기구 <노동기본권 옹호, 이라크 파병 반대, 집시법 개악 반대,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인권단체들>에 참여했다. 또한 2004년 5월 출범한 <인권단체연석회의>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016년 해체될 때까지 12년 동안 인권운동 전체의 전망과 함께 현안대응을 이끌었던 인권단체들의 수평적 네트워크 연대체로, <다산인권센터>는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중심축으로써 활동해왔다. 그리고 이후에는 단체는 물론 개인 인권활동가까지 아우르는 느슨한 연대체를 표방하며 2017년 활동을 시작한 <인권운동더하기>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한편 2002년 1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제 1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가 개최되었다. <다산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준비팀은 “현재 특정 사안별로 인권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전체 인권운동 진영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공간은 없는 실정”이라며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교류와 소통, 인권운동연대의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전국인권활동가대회’를 개최한다”고 개최 목적을 밝혔다. 이후 ‘전국인권활동가대회’는 매해 개최되면서²¹⁾ 인권단체들 간의 소통, 인권운동에 대한 공동평가, 새로운 인권의제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인권운동의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정정훈, 2021).

20) 이는 크게 세 가지 상황에 기초한다. 첫째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권의 등장이다. 1987년 6월 항쟁의 흐름 속에서 집권한 김영삼 정권은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수십 년간 계속되어온 군사독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 흐름을 형성했다. 둘째, 전문적 인권운동단체의 창립이다. 1993년을 전후로 종합적이고 일반적 인권운동단체를 표방한 세 개의 인권단체가 활동을 시작했다. 1993년 초 진보적 인권운동을 표방한 인권운동사랑방이 문을 열었으며, <다산인권센터>의 전신인 ‘김철준, 김동균 합동변호사사무실’ 내 인권상담소가 1993년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1994년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의 인권소위원회에서 독립해 독자적 인권단체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끼리끼리’, ‘친구사이’ 등의 성소수자 권리단체와 이주노동자단체 등 소수자단체들이 조직적 체계를 갖추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인권운동의 새시대가 열렸다(정정훈, 2021). 셋째,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영향이다. 당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충격이었다”라고 말할 만큼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인식을 갖게 되었다.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세계적 연대 등을 접하면서 인권활동가들은 새로운 문제의식을 통해 독자적 인권운동의 필요성과 한국의 인권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점이 되었다.

21) 참고로 2021년은 전국인권활동가대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이렇듯 <다산인권센터>는 2000년 이후 인권운동진영 연대활동의 주축으로 활동해왔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 네이스, 용산참사,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등을 인권의 중심적 의제로 밀어 올렸다. <다산인권센터>가 지역적 의제를 넘어 이러한 대응을 함께 제안, 조직하고, 주도한 것은 단체별 인권의제 대응의 한계, 영세하고 열악한 인권단체들의 조건, 그리고 활동 경험이 축적된 활동가 및 단체로서의 책임감 등에 기인한다.

“인권단체들이 다들 워낙 작잖아요. 이 작은 인권단체들 중에서는 다산이 그리 작지 않은 단체인 거예요. 현재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정도가 물량을 가장 많이 댈 수 있는 단체인 거잖아요. 그러다보니 주요 이슈가 터졌을 때 빠지기가 곤란한 거죠. 이 ‘물량을 댈 수 있다’는 것은 사람 수가 많다는 것이기보다는 경험치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큰 싸움을 얼마나 해봤느냐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빠지기가 어려워요, 계속 관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박진, 2017: 123)

이러한 활동들 속에서 다산은 지난 20년간 인권운동의 촉진자, 연결자, 그리고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 세 역할은 서로 분리되지 않으면, 상호 밀접한 연관을 맺고 교차하며 발전해왔다. 각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촉진자로서의 <다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운동 내에서 중요한 의제를 먼저 제안하고, 활동가들을 모으고, 활동을 함께 책임지는 단체라는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사회운동 안에 존재하는 의제들 안에서 인권의제를 포착하고, 인권의 관점으로 제안하는 촉진자로서의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는 것이 <다산인권센터>와 활동해온 활동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다산인권센터>의 이러한 저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다산인권센터>는 2020년 3월, 약 300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에 코로나 19와 관련해 인권단체 고민을 모아보자는 제안을 던졌다. 우리 일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전염병의 문제에 “어떤 인권의 언어를 보낼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어보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였다. <다산인권센터>의 제안에 인권활동가들의 응답이 이어지면서 3월 중순 첫 모임을 가진 활동가들은 이후 20개 단체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이하 <코인넷>)를 구성했다. <코인넷>은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취합하고,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하고, 관련해 필요한 기자회견과 대응에 나서는 등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인권의 원칙을 제시하고 감시하고 자료를 모으는 활동을 해왔다. 매우 중요한 사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을 때 <다산인권센터>의 제안이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권운동의 포문을 열어준 것이다. 이렇듯 다산은 의제를

먼저 제안하고, 자리를 만들고, 사람을 엮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해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오랫동안 인권운동 내에서 해왔다.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앞으로도 수행해주기를 요구받고 있다.

“동 띄어주는 역할을 다산이 해줬던 기억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코인넷>. 인권운동장이라는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에 랄라인지, 다산에서 메시지를 하나 올렸는데 정말 정리되지 않은 어떤 고민과 함께 ‘우리 모여서 뭐라도 해봐요’로 끝나는 제안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사실은 또 단체들 간의 협업이 그런 식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별로 없기도 하잖아요? 보통은 제안서가 들고 제안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잘 꺼내놓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산에서 그렇게 먼저 이 고민과 막막함을 나눠준 덕분에 인권 활동가들이 되게 많이 모여서 서로의 막막함을 ‘와다다다’ 쏟아내고 거기서 우리 네트워크를 꾸려서 뭐라도 해보자라면서 시작된 게 코로나19 인권 대응네트워크였어서 (다산의 인권운동에서의 위상을 생각할 때) 동을 띄우고 좀 연결하고 조직하는 그런 식의 역할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어쓰, 2022)

촉진자로서의 <다산인권센터>의 역할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인권단체들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활동, 2013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응에서도 빛을 발했다. 특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소위 진보진영조차도 의제화하기 부담스러워했을 때, <다산인권센터>는 국정원 중심 공안정국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와 위축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인권단체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인권의 원칙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터뷰를 제안했다. <다산인권센터>의 제안은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인권침해보고서 발간 및 보고대회 등으로 이어졌다.

“이석기 사건이 터졌을 때 되게 갑갑했잖아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운동 진영도 다 등 돌리는 이 마당에. 이랬을 때에 박진이 제안해 줬던 것은 피해자들이라고 할 사람들, 조사를 받았던 당사자들 인터뷰를 하는 활동을 제안 해줬었어요. (중략) 돌아보면 종종 그렇게 ‘뭔가 이거 되게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했던 그런 이슈, 누구 하나 손쉽게 먼저 손을 들지 못하는 그런 이슈에 있어서 먼저 제안을 해줬던 단체였던 것...” (랑희, 2022)

인권운동진영에서 촉진자로서의 <다산인권센터>의 역할은 보편적 인권의제를 아우르는 다산의 운동영역에 기반을 둔다. 또한 인권운동 안에서 다산이 차곡히 쌓아올린 활동 경험과 신뢰, 그리고 연대의 역사에 터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촉진자로서의 역할은 <다산인권센터>가 갖는 기동성에 근거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지역단체로서 여러 의제와 사안을 다루고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대응하길 요구받다보니 활동가들이 보다 의제를 사유하고 다루는 방식이 보다 자유롭고, 유연하다는 것이다.²²⁾ 또한 앞서 살

펴냈던 것처럼 수평적 조직운영에 따라 개별 활동가들이 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역시 중요한 이유다.

(2) 연결자로서의 <다산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는 지역운동과 인권운동, 시민사회운동과 인권운동을 잇고 접합하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역할의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우선 <다산인권센터>는 지역사회 또는 지역운동단체와 인권운동을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오랫동안 수행해왔다. 지역단체로서의 정체성과 인권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수원 경기지역 내에서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다양한 지역단체들과 연대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제기되는 현안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려 시도해온 것이다. 수원 촛불을 비롯해 수원 원천리천 물고기 폐사 사건, 수원시립미술관 명칭 짓기, 삼성 노동자 백혈병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수원 촛불은 연결자로서의 <다산인권센터>의 역량을 매우 잘 보여주는 사례다.

몇 년간 매주 수요일에 열린 수원촛불은 대중적인 운동형태이면서 지역자원들을 적절히 연결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기획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운영될 수 있는 운동방법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다산 활동가들은 매주 수원촛불을 준비하며, 참여단체를 조직하고, 발언자를 섭외하고, 관련한 준비물을 챙기는 등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가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애써왔다. 다산 활동가들이 “헌신성, 성실성, 기획력”을 발휘해 일군 성과였으며, 동시에 <다산인권센터>가 지역인권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각인하고 존재감을 드높인 운동이기도 했다.

“다산이 활동을 할 때 독자적으로 하기보다 늘 먼저 어디에 전화해서 우리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게 지역

22) 연구자: 다산은 굉장히 기동성이 뛰어난 단체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런 개인적 특성인가요? 아니면 지역 단체들이 갖는 그리고 다산만의 특성일까요?

박진: 지역 단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에서는 누구라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촛불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을 만났던 거잖아요. 그 대중에는 맨날 이명박 퇴진만 외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저열한 수준의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내쳐서는 사실은 지역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국힘도 만나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운동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은 사월만 해도 좀 달랐죠. 뭔가 혼란 과정을 거치고 우리한테 왔던 친구는 아니었고, 전형적인 선한 의지를 갖고 운동에 함께하고 싶었던 20대였기 때문에 좀 달랐는데, 다른 다산 활동가들은 대부분 그런 과정으로 단련이 됐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뭔가 이 의제를 가지고 길게 논의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 의제를 치고 나가서 달려가면서 대중들한테 이를 테면 맨날 이명박 얘기만 하는 사람들하고 ‘아유, 찡자 한번 가자’고 얘기하자고 이렇게 손잡고 가는 거예요. 가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이런 데를 우리가 가냐고 얘기를 하고, 저 운동권들은 자기 의도대로 저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주 지속적이고 오래되면 사실은 그게 동의가 되는 거거든요. 설득이 아니라 서로 이해가는 과정에서 이게 서로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활동가들이 대체적으로 겪고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몸이 가벼운 거죠. 이 의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돌파하는 것이 운동이다라는 것이 우리 나름의 경험에 축적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그것이 이제 맞다라고 경험상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서울 단체들이랑 많이 다르죠.”(박진, 2022)

운동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산이 지역에서 의제를 제기해주면 지역 단체들이 모이면서 운동이 만들어지는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런 과정이 다산의 운동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촛불을 우리가 좋게 기억하는 건 이런 성과 중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단체들이 다산에 기대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아, 다산은 이런데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왔고, 이런 과정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걸 한 줄로 다산의 성과라고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왔던 과정들이 우리한테 운동의 성과라는 생각이 들어요.”(랄라, 2022)

수원 경기지역 내에서의 활동을 통해 구축된 <다산인권센터>의 네트워크와 입지는 동 지역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현안에 여타 인권단체가 개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활동의 넓은 외연과 지역기반의 연대가 갖는 연결의 힘이다.

“경기남부지역에는 다산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일이 있으면 다산에게 물어보면 돼. 경기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센터 같은. 인권, 복지, 지역운동. 모르는 일이 있다면 다산에 물어보자. 요청하자. 다산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중략) 수원역 발달장애 여성노숙인 사건을 <경기복지시민연대>랑 같이 하기도 하고, 나눔의 집도 같이 하고. 지역 장애인 이슈, 사회복지 시설 이슈를 다산과 같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믿음직한.”(김정하, 2021)

이러한 연결자로서의 활동은 <다산인권센터>가 인권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다른 운동의 제와 인권운동을 교차시켜 잘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지역에 기초한 운동을 한다는 점에서 보다 기동적 대응이 가능한 활동 형태를 만들어냈다.

둘째 <다산인권센터>는 또한 지역운동과 인권운동을 넘어 시민사회운동과 인권운동을 연결하는 연결자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요구받고 있기도 하다. 중요한 사회의제에 대해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대응을 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광우병 촛불 집회, 세월호 진상규명투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인권단체가 시민사회단체 협의체에 가입해, 회원단체로 활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다산인권센터>는 2022년 1월 현재에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다. 이는 <다산인권센터>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수원시민단체협의회>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가입하면서 자동으로 전국 <시민사회단체연대회> 회원단체가 되었기 때문이다.²³⁾ <다산인권센터>가 전국 단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가입을 목적하진 않았지

23) “우리가 지역에서 너무 하는 역할이 없어졌다는 위기감 때문에 수원 시민협 들어가고 경기도 경기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로 들어간 거예요. 시민사회 운동에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라기보다는, 예전에는 그런데 안 들어가도 우리는 칸막이가 없었거든. 다산을 통하지 않으면 의제가 풀리는 게 별로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주 작게는 어디 후원 행사를 하는데 우리한테 연락도 안 했어, 이런 게 좀 막막한 일이었다고. 야 그거 너 몰랐어? 산재 노동자가 어디서 죽어서 투쟁을 하는데 우리는 몰라, 연락을 안 해.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느슨해져서 좀 같이 하자. 이게 이제 컸던 거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민사회단체연

만, <시민사회연대회의> 관계자들은 회원단체로서의 인권단체의 등장에 적잖은 의미를 부여한다. 현안 의제 대응을 위한 현장에서의 만남은 많았지만, 사회운동에 대한 전망 논의와 체계적 협업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산인권센터>는 장기적인 사회운동의 전망과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의제 대응에 있어 시민사회운동과 인권운동의 가교를 형성하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지금 인권운동판, 시민운동판(이) 단절되어 있다. 그래서 <다산인권센터>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연대회의 이슈에 기후위기가 중요 아젠다가 될 것 같고, 페미니즘도 시민단체로 분류되었던 단위랑 인권단체의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떠오르는 보편적 이슈고. 페미니즘과 기후위기 관련해서 다루는데 (<다산인권센터>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태호, 2021)

(3) 조성자로서의 <다산인권센터>

조성자로서의 <다산인권센터>의 역할을 검토할 때 특히 주목할 점은 <다산인권센터>가 지역단체이자 인권단체로서 인권의 제도화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이다.

<다산인권센터>는 2000년 이래 인권이 제도화되면서 추진된 다양한 인권제도와 정책, 기구 구성에 참여하고, 이후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수원시 인권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 대응 활동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역인권단체라는 정체성에 기반해 인권의 제도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지역 특성상 인권조례, 정책, 행정의 변화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고, 투쟁을 통해 성취한 성과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할 필요성, 지역 인권단체의 부재 등이 그 이유다. 또한 인권 정책과 제도 등을 통해 운동의 외연을 확장해나갈 필요성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에 따라 <다산인권센터>는 지역단체로서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매우 참여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비단 수원·경기지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대응활동이 대표적이다. 충남도의회는 성소수자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를 시도했는데, 당시 다산인권센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활동에 매우 열성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혐오세력의 도전에 의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후퇴하고, 조례가 계속적으로 후퇴하는 것에 대한 높은 긴장과 경계심 때문이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의 여파가 경기도, 수원 등의 일이 될 거라는 판단이었다.

“또 하나 (<다산인권센터>의) 역사 안에서 기억이 나는 거는 충남 인권 조례 폐지와 관련된 인권운동에 대응을 했었을 때. 인권운동에 조례가 폐지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대회의>를 들어가게 된 건데요. 우리가 들어간 동기보다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인권단체랑 계속 같이 교류하고 소통하려고 그러는데 인권단체들은 인권 단체만의 담을 쌓은 게 보이니까. 그런 걸 다산이 좀 넘어주기를 바랬던 거고 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박진, 2022)

이슈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또 결합된 활동가들은 되게 제한적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그 이슈에 집중하는 활동가들은 더 줄어들잖아요.……저의 경험 안에서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제도화 흐름에 좀 개입하려고 하는 다산의 움직임이 되게 이해가 갔었고 되게 적극적으로 좀 노력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었고요.”(정율, 2022)

다산 활동가들은 인권정책과 제도를 통해 지역인권운동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향후 중요한 다산의 전망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새로운 인권의 제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새로운 지역 인권단체 모델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수립하기를 고대하는 것이다.

“<다산인권센터>에서 인권정책이나 인권제도나 이런 것들을 운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넓혀낼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인권의 지형이 많이 달라져서 운동의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봐요. 제가 잘하는 운동방식은 아니지만 새롭게 진경아 활동가가 들어오면서 다산의 새로운 사업으로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인권정책 대응 활동 등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어디도 관여해서 지자체 인권정책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응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다산이 그런 역할을 좀 더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인권단체가 지역에서의 어떤 활동들을 해가는 모습들을 새롭게 모델링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쌤통, 2022)

2) 활동 전망에 대한 제안

(1) 조직운영과 관련된 제안

첫째, 조직운영과 관련해 활동가 중심의 활동체계는 단체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평등과 역동성을 유지하면서도 활동가 개인의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체계를 만들려면 안정적인 논의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인터뷰 과정에서 일이 바빠면 주간회의가 미뤄지거나 간단한 상황공유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사업평가서를 보면 내부논의 강화나 주간회의 정례화같은 안건이 다뤄지고 있음). 그런 점에서 주간/월간회의가 미뤄질 수 없는 가장 우선의 활동(내부활동)으로 인식되고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회의의 정례화만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에 대한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다. 공동의 합의란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충분한 논의과정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활동가가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사안일수록 회의 전에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고 상호간의 토론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활동이 바빠서 만큼 회의의 수를 더 늘리는 것보다는 한 번의 회의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내부평가 자료를 보면, 지금은 주간 회의가 주간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논의, 월간회의가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토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쟁점토론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방식이라 생각되는데, 주간회의와 월간회의를 구분하는 것을, 즉 주간회의가 긴밀한 소통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 월간회의는 한 달 동안 내린 결정에 대한 점검의 시간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소통사항이 아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반드시 남겨서 누가 무슨 사업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담당활동가도, 다른 활동가도 이 사업을 왜, 어떤 과정을 밟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활동가들의 연차가 다양해지는 만큼 활동가의 지속적인 재생산구조를 만들기 위한 내부 프로그램의 기획을 제안한다. 자체 사업보다 연대사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활동가의 활동역량이나 효과적인 관계망의 여부가 중요해진다. 지금도 활동가세미나나 신입활동가워크숍, 쟁점토론 외에 30주년을 맞이한 만큼 <다산인권센터>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신입활동가 학습프로그램, 상임활동가들의 내부학습 프로그램의 정례화도 필요하다. 그런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 일정에 치여서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단체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 정체성과 역사성,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공유와 이해가 중요한 만큼 외부일정에 밀려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 생각한다.

셋째, 3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분립한 조직과의 관계성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단순히 단체를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인권운동의 다양성을 확장하기 위한 분립한 것이라면 분립 이후의 관계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각각의 단체는 지역 내에서, 그리고 의제별 활동에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갈라지는지 확인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거나 접촉할 의제가 있는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분립된 조직과의 관계성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면 공간 마련을 통한 네트워크형 조직으로의 변화도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인권도시를 만든다는 전략 역시 이런 관계성 속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넷째, 보통의 시민단체의 경우 총회-운영위원회-사무국의 수직체계가 일반적이는데, <다산인권센터>의 경우 단체의 역동성과 활동가들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총회-운영위원회-활동가회의 형태의 수평체계를 제안한다. 이때 운영위원회는 일반적 의미의 의결기구가 아닌 활동가회의가 전담하기 어려운 교육, 재정, 기록 등의 구체적인 역할을 맡은 운영위원의 상이다. 지금도 2020년 사업평가서의 경우 운영위원회는 활동가 중심으로 움직이는 다산인권센터의 활동계획과 평가를 체계적으로 점검, 조언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관련해 소통하는 위상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위상은 명목적인 점검, 조언으로 그치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이후 형식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좀 더 적극적인 위상을 갖도록 하는 것, 일례로 교육위원이 활동가 교육이나 학습모임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 진행하고, 재정위원이 부족한 재정을 좀 더 채울 방법을 고민하고, 기록위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록과 아카이빙에 기여하는 형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회원들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출하고, 활동에 대한 의결권은 계속 활동가회의가 가지는 방식이 현실적인 체계로 여겨진다.

다섯째, 총회와 회원의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정관상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벚바리의 수가 계속 늘고 있고, 비영리민간단체로 전환할 경우 총회는 필수적이다. 현재로서는 회원의 역할에 대해 단체의 홍보나 교육사업 참여 등으로 잡고 있었고, 2020년부터 벚바리 모임을 지원하고 센터와 벚바리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잘 진행되지 못했다. <다산인권센터>에서 벚바리의 역할을 잘 정의하는 것이, 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소통의 어려움이나 갈등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정관상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일반적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조항을 준용한 느낌이라 <다산인권센터>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활동가 중심 조직이라는 정체성과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회원과 총회의 역할과 권한을 <다산인권센터>의 역사성에 맞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2) 활동의제와 관련한 제안

첫째, 노동인권 개념을 구체화시킬 과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노동인권은 사회권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나 노동3권과 달리 노동의제가 축소되고 왜곡되며 국가개입이 많은 한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다산인권센터>는 노동인권 개념을 통해 자신의 시민성을 각성한 노동자, 자신의 노동자성을 각성한 시민들이 만나 변화를 모색하는데, 그 방향은 무엇이어야 할까? 노동인권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 걸까? 시민성과 노동권이 충돌하는 지점은 없을까? 라는 물음을 던졌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다산인권센터>만의 몫은 아니고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나름의 해답을 찾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찾는 한 방법이 지역운동포럼이었고, 수원촛불이었다고 생각한다. 지역운동포럼의 경우 개최된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자료집은 있지만 매해 행사를 통해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어느 정도의 합의에 이르렀는지를 살필 자료는 없다. <다산인권센터>의 경우도 사안이 터지면 현안대응에 바쁘다보니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하나씩 달성하는 과정이 미뤄지기 쉽다. 한 해에 모든 것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해 어느 정도의 해답을 찾고 정리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디까지 논의를 정리했는지 살펴보고 그 내용을 지금 현실에 맞게 새롭게 다루려면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논의해야 할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예를 들어, 지자체에 만들어지고 있는 노동권익/인권센터와의 차별성 등).

이를 위해서는 노동인권과 관련된 내부사업계획이 잡히고 명확한 업무분담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연대사업에 쏟는 역량이 조절되어야 한다.

둘째, <다산인권센터>의 정체성이기도 한 지역인권 개념을 지금 현실에 맞게 구체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앞서 다룬 노동인권 개념과 비슷하게 지역인권 역시 인권의 제도화, 행정화 및 거버넌스 개념의 도입 이후 관련 지형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인권 거버넌스나 인권도시라는 표현이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고, 기후위기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인권운동의 주요한 의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산인권센터>가 생각하는 지역인권운동의 방향과 방법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운동의 정체성은 기존의 변혁운동과 달리 변화의 힘을 구체적인 사람에게 끌어내겠다는 방향이고, 그러려면 사람을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일찌감치 지역인권운동으로의 방향을 설정한 것과 달리 <다산인권센터>의 실제 활동은 활동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이런 정체성은 잘 형성되지 않았고, 내부 평가과정에서도 지역인권 개념은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운동이 단순히 지역에서 운동하는 단체를 가리키지 않는 것처럼, 지역인권도 단순히 지역의 현안에 인권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에 진행된 활동으로 보면 영화제나 인권학교, 소모임 같은 사업들의 의미가 교육사업에서 더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한 지식전달이나 교양을 넘어서 현실에 개입하고 그렇게 개입할 주체를 발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산인권센터>가 지향하는 지역인권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정리하려면 지역인권을 정립하는 것이 자체사업으로 기획되고 활동역량이 배분되어야 한다. 이 지향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다산인권센터>의 정체성 확립과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

셋째, 연대사업 속에서 <다산인권센터> 사업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사업평가서를 보면, 해당 사업 자체의 목표는 설정되어 있지만 그 사업을 통해 <다산인권센터>가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에 대한 정의는 없다. 예를 들면, 2021년 사업평가에서 수원4.16연대나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수원기후행동의 사업목적은 해당 단체의 사업목적이다. 그러다보니 총평이 다소 형식적이고 조직적인 결과로 남지 못한다. 해당 사업에 연대한 <다산인권센터>의 목적이 별도로 세워지고 그 목적을 실현할 방법에 대한 논의가 회의에서 있어야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현황에 대한 평가나 인상비평 정도에 그쳐서 다음 해 사업을 진행할 때 조금 더 진전된 목적을 세우고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넷째, 활동가 중심의 연대사업과 회원참여가 가능한 연대사업을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보안법이나 공권력감시대응처럼 활동가들이 선도적으로 대응할 사안도 있지만 기후행동이나 차별금지처럼 회원들이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다양한 참여방법을 기획할 수 있는 사안도 있다. 회원들과 함께 참여할 경우 연대사업이지만 자체사업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총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3) 위상과 관련된 제안

첫째, 활동만큼 정리와 학습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촉진자, 연결자, 그리고 조성자로서 <다산인권센터>의 위상은 활동가 개개인의 특징이나 운영체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연구진의 공통된 생각이다. 단체의 지난 30년 세월만큼 활동가들의 시간도 흐르고, 한국 사회의 여러 조건들도 변하고 있다. 어쩌면 더욱더 힘들고 비관적일 수 있는 앞으로의 조건들 속에서 <다산인권센터>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새로운 세대와의 세대교체를 이뤄낼지가 향후 비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중간을 맡을 활동가들이 사라지고 세대 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그 격차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면서 공감대를 찾아가는 과정은 스스로에 대한 학습이다. 활동가의 시간과 겹치고 또 겹치지 않는 단체의 시간, 단체가 속한 지역/국가의 시간을 함께 고민하며 지금 현재와 다가올 가까운 미래를 고민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학습과정에서 존중과 배움, 인정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산인권센터>의 영향력을 고려한 행보와 소통이 필요하다. 차곡차곡 쌓아올린 30년 역사와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다산인권센터>와 활동가들은 본인들의 의도/의지는 무관하게 인권운동 안팎으로 상징성과 명망성을 갖게 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다산 활동가의 고 박원순 장례위원회 참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취임은 인권운동 내부에 적잖은 혼란과 파장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판단과 결정은 단체와 개인의 몫일 수밖에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영향력 있고 발언력 있는 단체/활동가의 역할은 개방성을 높임으로서 중심을 잡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운동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사안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다산인권센터>가 먼저 제안하고 열어줄 필요가 있다. 외부에 있는 인권운동단체 혹은 개별 활동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논의를 제안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과정이 만들어질 때 단체 및 활동가들 사이의 혼란과 갈등, 상처가 최소화되고 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운동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인권운동 내외부에서 촉진자, 연결자로서의 역할 강조다. 2차례에 걸친 FGI에 참여한 시민사회인권운동 활동가들은 입을 모아 <다산인권센터>가 사회현상을 인권으로 접근하고,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하거나 융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했다. 이는 창의적 의제 제안 및 실행능력 뿐 아니라 다양한 운동의 넘나들을 연결하는 능력의 탁월함을 의미한다. 인권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안정적인 교류, 협력의 장이 많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의제를 가진 사람들이 접하고 상상력을 함께 발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의제와 운동들을 난상 토론하며 이룰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리들을 <다산인권센터>가 제안하고 만들어주길 바란다.

5. 나오며

2012년 9-10월호 《몸살》에 실린 하루의 ‘왕따 위원장 표현에 대한 유감’이라는 기고글을 읽으며 이것이 <다산인권센터>라고 생각을 했다. 당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왕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에 관한 입장문을 두고 <다산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긴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다산인권센터>는 사과문을 발표했고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의 기고문을 소식지에 실으며, 사안이 일단락되었다.

아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안다. 더구나 이 과정을 거쳐도 사안은 명확하게 정리되지도 않는다. 인터넷상의 이야기들은 쉽게 흥분되고 규정당하고 박제되어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도 시작은 분명 있고 잠재적인 끝도 존재한다. 빨리 마침표를 찍는 것보다 말을 꺼낸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듣고자 하는 태도야말로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다산인권센터>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식대로 가보자, 하지만 누구라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 그 실수를 개인의 몫으로 돌리지 않고 함께 책임져 보자, 그리고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일지 같이 고민해 보자, 이것이 <다산인권센터>의 방향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방향도 그러하리라 기대한다.

끝으로 연구진은 <다산인권센터>의 30주년을 함께 정리하고, 고민할 수 있어서 기뻐다. <다산인권센터>가 다시 내딛는 걸음에도 기쁘게 함께 하겠다.

1. 참고문헌

- 2009 지역운동포럼 in 수원 조직위원회. 2009. 《2009 지역운동포럼 in 수원 백서》
- 2010 지역운동포럼 in 수원 조직위원회. 2010. 《2010 지역운동포럼 in 수원 백서》
- 김정하. 2021. 「<다산인권센터> 창립 30주년 준비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간담회 녹취록」 다산인권상담소. 《다산인권》.
- 다산인권센터. 《몸살》
- 다산인권센터. 2003. 《10주년 자료집》
- 다산인권센터. 2012. 《20주년 자료집: 그 사람 스무 살, 인권은 즐겁다》.
- 다산인권센터 노동인권교육팀. 2011. 《노동자 이교대씨의 생존기》.
- 랄라. 2022. 「<다산인권센터> 창립 30주년 준비 다산활동가 간담회 녹취록 1」
- 랑희. 2022. 「<다산인권센터> 창립 30주년 준비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간담회 녹취록」.
- 박래균. 2021. 「<다산인권센터> 창립 30주년 준비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간담회 녹취록」
- 박진. 2017. 서교인문사회연구소 한국인권운동사 연구팀, 「한국 '진보적 인권운동'의 역사에 대한 인권활동가 인터뷰 자료집」
- 박진. 2022. 「<다산인권센터> 창립 30주년 준비 다산활동가 간담회 녹취록 2」.
- 송원찬. 2012. 「스무살 다산, 인물열전: 인권활동으로 물 만난 열명이 넘는 전사들」, 《20주년 자료집: 그 사람 스무살, 인권은 즐겁다》.
- 쌤통. 2022. 「<다산인권센터> 창립 30주년 준비 다산활동가 간담회 녹취록 1」.
- 아샤. 2022. 「<다산인권센터> 창립 30주년 준비 다산활동가 간담회 녹취록 1」.
- 어쓰. 2022. 「<다산인권센터> 창립 30주년 준비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간담회 녹취록」.
- 이태호. 2021. 「<다산인권센터> 창립 30주년 준비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간담회 녹취록」.
- 정율. 2022. 「<다산인권센터> 창립 30주년 준비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간담회 녹취록」
- 정정훈. 2021. 「한국 2세대 인권운동의 형성 계기와 그 성격」, 『민주주의와 인권』 21(4).
-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2021.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 운동 진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최종보고서》.

2. 부록: <다산인권센터> 활동의제 정리

<p>국가폭력대응 및 권력감시</p>	<p>범죄와 인권 수원지동살인사건 후속모임 익산택시기사살인사건 대응 사회적약자 변론권모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 재심 선고공판 용산진상조사단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용산참사 추모문화제 영화 '공동정범' 수원지역 상영회 내란음모피해인권보고회 '인권회의축진모임 '통합진보당 해산관련인권단체대응토론' 내란음모사건 재심 기자회견 SKY회의(프란체스코)/쌍용,강정,밀양 밀양 송전탑 투쟁(인권침해 현장조사) 밀양 송전탑 투쟁(밀양 인권침해 조사 발표) 밀양 기자회견 밀양 송전탑 투쟁(인권보고대회, 희망버스, 촛불문화제) 밀양희망버스 밀양 송전탑 투쟁(밀양인권침해보고회) 밀양 송전탑 투쟁(밀양송전탑건설 관련 인권회의, 기자회견, 국회증언대회 밀양인권보고서회의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단 발족, 조사단 회의, 2차 민중총궐기(인권침해감시단) 백남기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도보순례 백남기농민 추모대회 수원지역 백남기 농민 사망 규탄 기자회견 수원역 시민분향소 설치 "백남기 농민 사건 책임자 수사 촉구" 검찰청 앞 1인시위 국가폭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새누리당 복면금지법 규탄 기자회견 집시법 제11조 토론회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집시법 제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집시법 제11조 개악안 상정 규탄기자회견 집시법 제11조 폐지 워크숍 집시법 11조 폐지 선언대회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물대포 공격 1년, 물대포 추방의 날 선포대회 증언대회,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p>
--------------------------	--

	<p>“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경찰 인권과제 촉구 기자회견 “책임자 처벌 없이 ‘인권경찰’ 없다” 인권침해 주범 경찰 규탄집회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경찰청진상조사위원회 성과보고회 경찰개혁방안 및 계획수립을 위한 공동워크숍 정보경찰폐지네트워크 발족 토론회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경찰개혁네트워크 워크숍 경찰개혁네트워크발족식및토론회 경찰개혁네트워크 내부워크숍 경찰개혁네트워크 간담회 경찰개혁네트워크_경찰개혁방안모색연속토론회 경찰개혁네트워크_‘정부의 경찰개혁안,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기자회견 국정원 촛불 국정원 관련 인권단체 간담회 국정원시국회의 여기 국정원이 있다.’ 국정원 점심 나들이 국정원강좌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관련자 전원 엄중처벌 촉구하는 고발기자회견 정보기관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국보폐지센터모임 국가보안법폐지 국회토론회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간담회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_베를린연수 ‘국가보안법을박물관으로’전시회추진위원회_기자회견 국가보안법박물관으로_전시회 오픈식 국가보안법을박물관으로전시회_오프라인개관 자유권규약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민사회간담회 자유권 이행 점검을 위한 정부&시민단체 간담회 사형폐지문화제 4.3 70주년 분향소 여는 날 국제심포지엄 참가자 수행(기자 간담회 &청운동 세월호 가족 기자회견&백남기대책위 방문 등) 윤중사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 집단따돌림 및 부당 해임 사건 관련 대응</p>
<p>민주주의</p>	<p>수원촛불 민주주의 시민토크 박진_선거법(국민참여재판) 수원촛불엠터</p>

<p> 동네촛불(만석공원, 호매실, 팔달, 권선) 수원시국대회 시국기도회 지역운동포럼 준비회의 수원시립미술관 명칭 관련 대응회의 및 간담회 수원시립미술관 명칭 관련 대응활동 (기자회견, 공청회) 지역운동포럼준비회의 수미네 금속노조 지역운동회의 수미네 무한도전 수원촛불(국정화반대) 수미네 도시락 파티 경기시국선언'박근혜퇴진 새누리당해체촉구' 수원 분노하는 사람들 '분노의 샤우팅' 선전전 수원지역 박근혜 퇴진 운동 본부 간담회 새누리당해체긴급 오찬회동 박근혜 퇴진 수원시민행동 발족식/ 기자회견 수원 분노하는 사람들 퍼포먼스 새누리당 해체 2차 긴급 오찬회동 "삼성적폐청산!박근혜게이트진짜주범이재용을구속처벌하라"기자회견 "2017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박근혜퇴진수원시민행동 토론회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수원역 앞 선전전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이재용 구속촉구 수원역 앞 선전전 "박근혜는 퇴진하라! 현재는 탄핵하라!" 수원시민촛불문화제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수원시민촛불문화제 "일상의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포럼 2017년 첫 번째 만남 "불륨을 높여라" 수원시민촛불문화제 "국민촛불 승리를 통해 본 수원지역운동의 과제와 방향" 수원지역 토론회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포럼 "마을활동과 시민교육" "촛불 그 이후" 활동가 집담회 "개헌? 왜, 무엇을, 어떻게?" 수원지역 강연 수원촛불 리부트, 촛불 들기 딱 좋은 날! 국민주도 헌법개정을 위한 시민대회 "국정농단 뇌물범죄자 엄중처벌! 삼성적폐청산! 5년은 부족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을 엄중처벌하라!"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촛불 1주년, 촛불은 계속된다" 민주주의를 위해 수고한 모두의 수원촛불문화제 일바시워크숍 지역운동포럼 준비를 위한 간담회 </p>
--

	<p>이재용 구속축구 시민 촛불 문화제 2018 수원지역운동포럼 '만남 상상 연대' 지역운동포럼 후속 성평등워크숍 책고집강좌 1~8강 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 집담회 20주년 기념 특별강좌 민주주의와 인권 선거법(국민참여재판) 교과서국정화저지경기네트워크 경기민중 총궐기 민중총궐기 일본군 위안부 한일협상 폐기 촉구 경기, 수원시민 행동의 날 소수 종교인에게 무한특혜, 종교인과세 2년유예 김진표 규탄 기자회견 '공범자들' 수원지역 공동상영회 김진표국무총리 지명반대 경기지역 기자회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거주시설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활동</p>
<p>노동인권</p>	<p>영화 '그림자들의 섬' 상영회 에버랜드 노동자 김주경 사망 대책위 활동 전문계고 노동인권 교육활동 전문계고 노동인권 교사 직무연수 교육활동 장투사업장 노동자 인터뷰집 '사람꽃을 만나다'출간 참여 '사람꽃을 만나다' 책 출간 기념 북콘서트 화성 팔탄 공단 폭발사건 대책위 활동 SJM용역폭력사건 지역대책위 활동 SJM 투쟁 SJM 경기지원대책위 경진여객 경진여객 공대위 경진여객 대책위 대표자회의 경진여객 1인시위 삼성 희망식당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모임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집회 방해 관련 기자회견 르노삼성 직장내 성희롱사건 대응 르노삼성 직장내 성희롱사건 기자회견 르노삼성성희롱사건대책위 활동 르노삼성 직장내 성희롱사건 관련 토론회</p>

<p> 삼성불산누출사고 국회토론회 삼성노조 주점 에버랜드 나들이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체회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워크숍 삼성전자 서비스 공대위(기자회견/결의대회) 반올림(반달공동행동_화성/기흥공장 선전전) 노동자통제전략회의 삼성전자 서비스 공대위(선전전/1인시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워크숍 수원대 기자회견 삼성전자 서비스 공대위 삼성노조파괴전략 기자회견 에버랜드 나들이 투쟁 노동자통제 워크숍 삼성노조파괴전략 보고서 대응 반올림(교섭팀회의) 삼성전자 서비스 공대위(최종범열사 대책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직장내성희롱 대책마련토론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회의 (토닥토닥지원단) 작업장 내 괴롭힘 연구모임 탐욕의 제국 상영회 반올림회의 삼성이산화탄소누출 고발기자회견 에버랜드 봄소풍투쟁 삼성전자서비스 아산센터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 관련 대응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관련 활동(염호석 열사) 작업장 내 괴롭힘 연구모임 삼성서비스센터 관련 활동 삼성서비스노동자인터뷰 삼성서비스기도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사무국)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워크숍 반올림(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 직업병 국회토론회, 반달)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활동 (사무국) 삼성불산대책위(삼성불산 관련 고용노동부 기자회견, 시민선전전, 민관합동조사단) 반달공동행동 </p>

	반올림(농성시작)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바대회 고 황유미 추모제 삼성 수원 이사 기자회견 반올림 100분토론 반올림 200일 문화제 경기 노동관련 토론회 반올림 300일 문화제 조선 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출범기자회견 민주노총금속노조경기지부대창치회문화제 고 황유미 10주기 및 삼성전자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집중행동 “79명의 행진” “이제 삼성에서 노조하자!” 삼성 웰스토리 노동조합 설립선포 기자회견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관리의 삼성 규탄, 삼성직업병 해결!” 끄적마 삼성 문화제 “반올림 10년, 변한 것과 남은 과제” 반올림 10주년 토론회 “반올림 10년의 변화,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 반올림 10주년 문화제 “반올림 10년 우리는 아직도 거리에 있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 기자회견 반올림 언론보도피해소송 판결의 의미 국회 토론회 故 황유미 11주기 반올림 기자회견 및 도보행진 삼성 노조파괴 음모에 대한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촉구 기자회견 집회 중 노조원 불법연행 규탄 기자회견 반올림 1000일 문화제 11년의싸움,1023일의농성을기억하는이들과함께하는반올림농성마침문화제 반복되는화학물질누출사고와노동자죽음,삼성을규탄한다!기자회견 삼성반도체이산화탄소누출노동자사망사고대책위원회출범기자회견 삼성반도체 직업병피해자 고 황유미 12주기 추모문화제 한혜경님 산업재해 인정 축하음악회 삼성해고노동자 고공농성자 관련 인권위 기자회견 및 촛불문화제 삼성해고노동자 고공농성장 지킴이 및 문화제 추최 삼성해고노동자 고공 농성 길거리 강연 삼성해고노동자 고공농성장 지킴이 삼성해고노동자 고공농성 문화제 삼성해고노동자 고공농성 집중문화제 삼성그룹 노조파괴 범죄자 45명 엄중처벌 촉구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단 기자회견 삼성해고노동자 고공농성 수요문화제 삼성 민간단체사찰대응 기자회견 쌍차경기시국회의(쌍차 일일지킴이) 대한문집중집회 쌍용자동차농성 쌍차경기시국회의(결의대회)
--	--

	<p> 평택 쌍차촛불 희망김장 쌍용차송전탑문화제 쌍차 경기시국회의(쌍차 국정조사 촉구 1인시위, 희망버스) 함께살자 농성장 쌍차경기시국회의(쌍차송전탑 문화제, 쌍차 희망건기, 쌍차 송전탑 농성결합, 대한문 농성) 쌍차 경기시국회의(쌍차 미사, 촛불) 쌍용자동차 범국민대회 대한문쌍용차분향소와인권활동가들의이야기마당"연해대YOU" 쌍용자동차 사태 2000일 집회 쌍용자동차노동조합지지 단식 쌍용자동차노동조합 범국민대회 쌍용자동차노동조합 '같이 살래요' 행진 쌍용자동차해고자46명출근투쟁및기자회견,자원활동가모임(반차별세미나) 현대차와 유성기업에 노동의 존엄을 묻는다.-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유성 이어말하기 유성기업 기자회견 유성기업한광호와함께하는별뿔별이빛나는밤에(바자회및콘서트)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인권활동가문화제 "혼술남녀가 신입조연출 PD를 죽였다" 대책위원회 입장발표 기자간담회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tvn 혼술남녀 신입조연출 이한빛PD 시민추모문화제 "이한빛PD를 잊지않겠습니다" CJ E&M과의 공식논의 결과보고, tvn 신입조연출 이한빛PD 추모제 "당신의 1시간을 위한 우리의 24시간,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고 이한빛PD 사건 이후, 드라마제작현장의 노동실태 개선 국회토론회 방송업계제도개선 토론회 비정규직여성노동자토크쇼 수원대 관련 길거리 특강 공무원노조 국보법 관련 기자회견 동서공업문화제 박종태 출판기념회 포레시아 문화제 철도 촛불 수원대 관련 대응 노동자통제전략대응회의 </p>
--	--

	<p> 티브로드 노조 간담회 티브로드 경기대책위 KT사례로 본 직장내 괴롭힘 국회 토론회 수원대 관련 대응활동(인권침해 보고대회) 작업장 내 괴롭힘 연구모임 금속노조 지역운동 관련 회의 코오롱 정리해고 관련 기자회견 및 문화제 농협노조 직장내괴롭힘 모임 르노삼성 공대위 조장희해고 무효신고대응 토론회, 구의역 사고로 본 '직업중지권과 안전할 권리' 그는 왜 위험을 거부할 수 없었나 고 김용균 경기지역 추모대회 고 김용균 진상조사위 간담회 태안화력발전소 인권실태조사 보고회 민중 총궐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한상균 석방 콘서트 고 김태규 노동자 추모문화제 '고 김태규님 추락사 산재사망 책임자 불기소 수원지검 규탄' 1인시위 파인텍지회 고공농성자 연대 기자회견 MBC 계약직아나운서 직장괴롭힘 방지법 1호 진정 기자회견 한익스프레스물류센터산재사망사고분향소방문 김천톨게이트해고노동자 희망버스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해' 톨게이트해고노동자인권단체연대문화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본부_1인 시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_국회 앞 동조단식 노동인권강사단 비정규노동인권네트워크 노동인권교육 워크샵 노동자대회 작업장 내 괴롭힘 연구모임 노동인권강좌 진행 노인정모임(노동인권) 노동인권강사단 노동인권교육 워크샵 노동인권전략모임 인권단체 노동권팀 직장내 괴롭힘 연구모임 </p>
--	--

이주노동자인권	<p>경기이주공대위 활동</p> <p>이주민건강권 권리선언 기자회견</p> <p>수원의제21 이주민분과활동</p> <p>이주민범죄예방대책토론회</p> <p>이주노동조합 농성장방문</p> <p>경기 이주공대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단식 중인 이주노동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p> <p>경기 이주공대위 '이주 노동자 단속 추방 중단' 캠페인</p> <p>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이주 노동자 대회</p> <p>"인종차별과 단속추방을 반대한다"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경기지역 기념대회 및 토론회</p> <p>이주노동자 2017 노동절 집회</p> <p>이주노동자의 삶, 정말 안녕하신가요?"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을 위한 한마당</p> <p>"최저임금 1만원 쟁취! 숙식비 지침 철폐!" 이주노동자 수원역 결의대회</p> <p>"노동자도 인간이다. 폭력연행 사과하라!"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사하는 수원출입국 규탄 기자회견</p> <p>이주노동자 폭력단속 및 이주인권 활동가에게 폭력을 자행한 울산출입국 규탄 기자회견</p> <p>"이주노동자도 집에서 살고싶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수원역 앞 캠페인</p> <p>"이주노동자의 삶, 정말 안녕하신가요?"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p> <p>"수원지검은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 수원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의 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p> <p>이주노동자 편견조장, 노골적 차별선동하는 국회의원 홍철호 규탄 기자회견</p> <p>"이주노동자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보장,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회 앞 1인시위</p> <p>살해당한 태국 이주 여성 노동자 추모와 단속추방 중단 및 이주민 인권보장 촉구 기자회견</p> <p>이주노동자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한 고용노동청 앞 1인 시위</p> <p>이주노동자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한 고용노동청 앞 1인 시위</p> <p>이주민구술생애사 <담> 프로젝트 '담을 허물다' 출간 기념 토크콘서트</p> <p>경기이주공대위 워크숍</p> <p>이주노동자 차별하는 의정부고용센터 결의대회</p> <p>여수외국인보호소 참사 11주기 기자회견</p> <p>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의 날</p> <p>인종차별철폐의 날 집회</p> <p>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투투버스' 여주양평 사업장</p>
---------	---

	<p>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투투버스' 성남노동지청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투투버스' 서울고용노동청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투투버스' 화성고용센터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투투버스' 전국 공동행동의 날 이주노동자 투쟁 투어 '투투버스' 세종시 고용노동부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수원출입국사무소의 비인도적 강제단속 규탄 기자회견 인종차별철폐의날 집회 _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 경기이주공대위 인종차별 철폐의날 토론회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미등록이주민 단속실패 파악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주민구술생애사 프로젝트 '담 허문 자리, 움트는 현대의 꽃' 북콘서트 전국 이주인권활동가 대회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외국인보호소 내 외국인사망사건 관련 법무부규탄 기자회견</p>
<p>장애인권</p>	<p>장애인인권영화제 GV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경기도복지사업확대축구"기자회견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투쟁 결합 전장연 집회 장애인 연대 기자회견 전장연 더민주 당사 점거농성 지지방문 장애 해방 운동가 정정수 열사 10주기 추모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농성장 연대방문 경기도장애인표준사업장 인권침해사건대응 간담회 '경기도장애인표준사업장 인권침해' 장애인고용공단 면담</p>
<p>청소년인권</p>	<p>수원시 보육 정책과 면담 사람 책(연무중) 어린이집 CCTV부모모임 학생인권실천계획 인권친화적학교+너머 경기지역 학생인권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경기학생인권실현네트워크 거리청소년 정책토론회 학생참여위원회 토론회 들꽃 청소년 미팅 경기도학생참여위 토론회 경기학생인권실현네트워크</p>

	<p>학교폭력 워크숍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전체회의 학교폭력생활기록부 기재 거부 교사 징계 규탄 기자회견</p>
성평등	<p>청년여성 1인가구에게 '주거 안전'을 묻다 토론회 <토론회> 혐오를 혐오로 덮는 사회, 안전할 권리에 대해 묻다- 강남역 살인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 수원역 미투 선전전 인권운동 미투 간담회 성폭력 성차별 없는 세상을 열어젖히는 수원시민 이어말하기 안희정 성폭력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경기지역 규탄 기자회견 가해자에 질문하지 않는 사회 '안희정 1심판결에 부처' 성평등 이제 말을 건네야 할 때, 수원지역 성평등 워크숍 경기지역 여성주간 토론회 '여성에게 안전이란' 경기도성평등조례 집담회 N번방규탄 기자회견 N번방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p>
반차별	<p>평등해야 안전하다 인권단체 토론회 11일- '런던 프라이드' 수원지역 공동상영회 차별없는수원만들기 기획단 회의 및 활동 차별특강 퀴어퍼레이드 "평등의 날개를 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향한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기자회견 "혐오와 폭력에 투표하라는 대신! 이대로는 안된다!" 인권단체 긴급 기자회견 "우리는 함께 기억할거야" 강남역 살해사건 1주기 수원지역 추모행진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혐오에 편승하며 인권을 인질 삼는 퇴행을 멈춰라!" 인권, 시민사회단체 대국회 규탄 기자회견 "차제연이 간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확산을 위한 전북지역 간담회 "차제연이 간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확산을 위한 고양지역 간담회 "차제연이 간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확산을 위한 수원지역 간담회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성적지향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시도 철회 촉구 인권, 시민사회, 노동계 기자회견 "혐오를 넘어 사람을 보라!" 12월 1일 세계에이즈의날 30주년, HIV/AIDS 인권주간 행동선포 기자회견 "차별을 말하다! 평등을 외치다!"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수원지역 캠페인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대회 "우리가 연대! 평등한 세상!"</p>

<p>차별금지법제정연대 워크숍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혐오없는선거,평등한우리동네만들기전국릴레이기자회견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기본이 되는 선거를 원한다!” 서울시장후보혐오표현에대한국가인권위공동진정 이슈수다회 ‘한국사회, 난민혐오 마주하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토론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경기 수원지역 간담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경기 수원지역 선전전 차별금지법제정촉구! 평등행진선포! 전국동시다발기자회견 ‘우리가간다! 차별금지법이온다!’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으로평등세상앞당기자!경기수원지역기자회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경기 수원지역 캠페인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우리가 간다! 평등행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시위 세계에이즈의날 기념 HIV/AIDS 혐오/차별선동 규탄 집회 ‘HIV/AIDS 혐오를 멈춰라!’ 10일-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나라,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피켓팅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워크숍 성소수자인권포럼_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스참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안 설명회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부산지역 간담회 혐오대응집회 워크숍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레즈비언상담소 간담회 2019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무지개가 광나는 밤 대행진 서울퀴어문화축제 참여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경기수원반차별연대체 ‘평등을 위한 용기’워크숍 반차별자원활동가 모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토론회-혐오벗는 선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잇수다 이꿈이-전장연활동가대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오픈 차별잇수다-가족 혐오세력대응모임 관련 경기도의회 간담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역워크숍 ‘반차별 설국열차’ 인천퀴어문화축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한달 선포 기자회견 4대종단과 함께하는 차별없고 평등한 세상 말하기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수원역캠페인</p>

	<p>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직접행동-응답하라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2019 평등행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직접행동-응답하라 민주평화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직접행동-응답하라 자유 한국당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경기도의원 간담회 평등한 지역사회를 위한 준비운동 워크숍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잇수다 이꿈이 진행 및 간담회-유니브페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회토론회 ‘차별금지법 제정,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말하는 우리, 커지는 용기’ 2019차별잇수다 돌아보기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_부천지역간담회 배제없는기본소득시민들이만들자_사회복지공동모금회협약식 차별금지법제정연대_쟁점워크숍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_고양시시민단체 간담회 경기도 외국인혐오관련 시민사회 의견청취 공청회 차별금지법제정촉구기자회견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_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_‘코로나19와인권이야기’강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버스 수원방문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차별금지법제정촉구1인시위 차별금지법제정연대_1111평등절 선포 기자회견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_‘차별금지법,무엇이든 물어보살!’ 차별금지법제정연대_지하철 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_지하철행동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_세계인권선언기념일기 차별금지법제정 촉구 경기지역 캠페인 다산인권센터 평등밥상 반차별자원활동가 모임 및 나들이 자원활동가모임(반차별세미나) 충청남도 인권조례 지키기 원정대 지방선거 혐오대응 전국네트워크 마무리 기자회견</p>
반빈곤	<p>반빈곤 모임 수원 파산 토크콘서트 전주 파산 토크콘서트 부산 파산 토크콘서트 광주 파산 토크콘서트 서울 파산 토크콘서트</p>
환경오염	<p>위험사회를 멈추는 시민행동(노후원전, 규제완화 추진 관련)</p>

	<p>삼성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 대책위 유해화학물질알권리모임 삼성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 대책위 유해화학물질알권리모임 화학사고 대응 및 알권리 실행방안 토론회 광교상수원범대위'수원시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즉각철회!'기자회견 12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반대를 위한 광교산 등반대회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수원역 앞 선전전 "광교상수원문제 회피하는 수원시의회 규탄" 기자회견 "광교상수원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토론회 광교상수원 지키기 시민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 및 집중 서명전 시작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지키자" 수원시청 앞 1인시위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화성행궁 앞 주말선전전 이슈수다회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나로부터 시작되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지키기 Festival! 가습기 살균제 지역간담회</p>
<p>기후위기</p>	<p>기후위기관련탄소배출대표기업삼성전자규탄기자회견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인권위진정제출</p>
<p>세월호참사 ·코로나19</p>	<p>영화 '나쁜나라' 상영회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 (분향소 설치 등)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 (길거리 특강, 분향소 운영, 검은티행동, 촛불문화제, 수원선언팀 등) 세월호 존엄안전위원회 활동 세월호구술모임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집중서명 및 선전전, 운영위원회, 수원시민공동행동 등)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세월호 기다림의 버스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분향소지킴이, 수원시민공동행동, 칠보마을촛불, 새누 리당 앞 릴레이단식 등)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수원시민공동행동, 시민행진, 동조단식, 현수막 개시 등)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4.16 지킴이 활동, 수원공동행동활동 등)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공동행동활동, 다이빙벨 수원공동체 상영, 송년회 등)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세월호 국제팀회의 세월호 존엄과안전위원회</p>

<p>세월호참사 ·코로나19</p>	<p>세월호 심리치유분과회의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워크숍 세월호 인권선언기획단 세월호 안전대안전락회의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세월호 지원협력대응팀 인권운동장-존엄위 전체 워크숍 세월호인권실태조사단 세월호 팽목항 방문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세월호지원소위 대응협력회의 세월호인권실태조사단 세월호수원공동행동 4.16인권선언제정위원회출범 국민연대100대과제준비회의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콘서트 국민연대100대과제준비회의 4.16 인권선언 추진 원탁회의 세월호집중투쟁 416인권선언 4.16인권선언 세월호인권실태조사단 세월호인권실태조사보고회대회 수원촛불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세월호참사 500일 촛불 문화제 '이상한 나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4.16인권선언 세월호특별법통과1주년 청소년과 세월호 토론회 인권선언합동회의"4.16인권선언" 세월호 4.16인권선언 기자회견 미수습자 가족위로의 밤 416연대 후원의밤 416조례 간담회 416연대총회 세월호 700일 & 304인의 신발 퍼포먼스 세월호 참사 2주기 수원시민 분향소</p>
-------------------------	--

<p>세월호참사 ·코로나19</p>	<p>다시 봄이 올거예요. 수원지역토크콘서트 4.16인권선언 토론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세월호 800일 특별법 개정 촉구 문화제 416연대 수원회원 모임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위한108배 시민동참릴레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지지방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단식농성지지 수원지역 행동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단식농성지지 인권단체 행동 세월호 진상규명, 수원지역 국회의원 릴레이 간담회 (김영진 국회의원) 세월호진실규명, 귀향선전전 국회선진화법 약용해 세월호특별법 개정 방해하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세월호진상규명,수원지역국회의원릴레이간담회 세월호900일집중실천전 세월호참사 1000일을 기억하는 수원시민촛불문화제 세월호3주기 기억과 약속의 수원시민분향소 운영 시작 세월호3주기 기억과 약속의 수원콘서트 “4월 16일의 약속, 함께 여는 봄” 서울 수도권 전야 기억 문화제 참여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 참여 시와 노래로 기억하는 세월호 1100일 북콘서트 “돌아 봄”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 수원지역 상영회 및 간담회 “물으로 올라온 세월호!” 세월호 목포신항 방문 노란버스 “진실과 기다림의 전국 집중” 세월호 목포신항 방문 노란버스 “4.16 당신을 기다립니다” 수원지역 ‘일일찾집’과 ‘송년문화제’ 416가족극단노란리본 초청 연극 세월호 시민사진전, 분향소 여는 날 세월호 4주기 문화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 416가족협의회와 함께하는 가을 소풍 4.16생존학생과 함께 하는 수원지역 간담회 세월호참사 5주기 수원시민문화제 4.16연대 간담회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청와대 앞 피켓팅 4.16퇴근길 피켓팅 416노란차량행진 세월호사고해역 참배 세월호참사6주기기억주간_수원역 앞 움직이는 기억의 공간 4.16연대_진상규명 워크숍</p>
-------------------------	--

	<p>4.16연대_검찰 특수단 기자회견 수원4.16활동가 사전워크숍_소통훈련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청·청와대·광화문앞 피켓팅, 수원4.16활동가워크숍_걸으며 만들어가는 4.16이야기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위한 광화문 앞 피켓팅 수원4.16운동 기록집 좌담회 수원4.16연대_간담회 수원4.16운동기록집 기획팀 목포방문 수원노란행동_세월호진상규명을위한입법청원참여요청피켓팅 수원4.16운동기록집_그날이후멈추지않았다 발간 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 청와대앞 피켓팅 코로나19 사회경제적 위기대응 시민사회단체대책위 기자회견 코로나19경제사회적위기대응시민사회대책위워크샵 코로나19경제사회적위기대응시민사회대책위_출범 기자회견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_기자회견 배제없는 기본소득, 시민들이 만들자_좌담회 재난기본소득이주민배제규탄1인시위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_보고회 코로나19서울시민관협력반_토론회 재난기본소득 이주민 배제 규탄 기자회견 코로나19방역을 위한 집회금지규탄기자회견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_국회 토론회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_집담회 코로나19 의료 공백 실태조사_보고회 코로나19 의료 공백_기자회견 코로나19대응_경기지역토론회</p>
<p>인권교육</p>	<p>마음샘 당사자/ 종사자 교육 마음샘 인권교육 헤드(HEAD/ 인권, 교육, 자치, 민주주의)모임 인권교재회의 헤드(인권, 교육, 자치, 민주주의)세미나 연무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사람 책 수일중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사람 책 인권교육팀 쫄득이(인권교육센터 준비모임) 인권교육온다 독립준비 인권교육온다 창립식 인권학교 '인권이 내게로 왔다'(1강~6강)</p>

	인권학교 '인권이 내게로 왔다' 2강
인권영화제	DMZ영화제 수원지역 상영회_카운터스 DMZ 영화제 수원지역 상영회_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
인권정책	국제인권단체감시결과발표 유엔 인권이사회 모니터링 보고대회 UPR간담회 이슈 수다회 "내가 원하는 공약은?" 국가인권위 업무추진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토론회 국가인권위 2020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간담회
인권거버넌스	인권도시토론회 서울시공무원 인권강령작성 회의 인권도시 내부 워크샵 인권도시 워크샵(장애, 이주, 시의원 등) 수원시인권조례추진위 인권도시 간담회 광주 인권도시포럼 수원 시민권리선언 수원시 인권자문회의 수원시 인권위원회 수원시인권위원회 소통모임 서울시 인권헌장 기자회견 수원시 인권위원회 워크숍 수원시캐릭터 인권센터 진정 기자회견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수원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의견 제출 수원시 규탄기자회견 '인권에 보류는 없다. 수원시인권기본조례 즉각 개정하라!' 광주세계인권도시 포럼 세계인권도시포럼
인권네트워크	인권콘서트 "양심수석방" 인권콘서트 "양심수석방"평가회의 한국인권회의 한국인권보고대회 인권운동포럼 그날들 기자회견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파티 인권활동가대회 준비 및 참여

	<p>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임시운영진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100차 정기회의) 인권운동장 “광장의 목소리를 기억하라! 문재인 정권 출범,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새 정부 인권과제 제안 기자회견 “인권운동,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한걸음 더 내딛기 위한 전략 워크숍 “인간답게 살아보자!” 촛불 1주년 인권결기대회 플래시몹, ‘내게 온 인권선언, 불온한 외침’ 세계인권선언 70년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 세계인권선언일 69주년, 정권은 바뀌어도 인권은 그대로. 지금, 여기, 인권이 필요하다! 인권단체 기자회견 세계인권선언일기념7272공동행동 세계인권선언 70년, 연속토론회 ‘위험한 안전, 불온한 안전’ 세계인권선 70년, 연속토론회 ‘평등은 평등으로 가고 있는가’ 세계인권선언 70년, 연속토론회 ‘을 노동의 돋보기인가 지우개인가’ 세계인권선언 70년, 연속토론회 ‘피해자의 자리와 연대의 거리’ 세계인권선언 70년, 연속토론회 ‘평화보다 먼저 온 질문들’</p>
<p>기타</p>	<p>“생명과 평화를 위한 한걸음” 수원 군공항 폐쇄를 위한 1인시위 생명평화대행진 ‘수원 군 공항’에 대한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미국전쟁행위규탄 및 파병반대 기자회견 난민 반차별 위한 인권단체 간담회 난민과 함께 하는 행동의 날 홍콩시민을 지지하는 수원지역 연대 캠페인 홍콩연대 방문</p>

토론1

지역, 인권운동의 방향?

:울산인권운동연대의 경험을 중심으로

박영철(울산인권운동연대)

1. 지역에 기반한 인권단체의 역할

2000년 6월 23일에 공식 창립한 울산인권운동연대는 어느덧 23년째 울산지역의 인권단체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06년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울산인권운동연대는 부설기관으로 인권교육센터(2009년)와 인권연구소(2011년)를 두고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는 기본적으로 지역단체로서의 정체성과 인권운동단체로서의 정체성이라는 비슷한 고민 앞에 놓이게 된다.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모든 지역 사안에 인권단체로서의 입장을 갖고 참여할 수는 없다. 때론 인권과 무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체로서 참여를 요청하는 손길을 뿌리치기란 만만치 않다. 지역에 기반하여 활동한다는 것은 지역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로서 담당해야 할 숙명과도 같은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울산인권운동연대 역시 23년 동안 울산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인권운동단체로서 인권의 보편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단체의 역할에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해왔다.

23년 동안의 변함없는 활동과 노력을 통해 부족하지만 <다산 30주년 보고서>에 거론된 지역에서 촉진자, 연결자,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인권단체로서 울산에서 활동하고 있다.

2. 울산인권운동연대의 경험

① 창립 그리고 시련

울산인권운동연대가 지역사회에서 지금처럼 신뢰받는 단체로 인정받기까지 수많은 부침이 있었다. 1999년 11월 단체 창립을 준비하던 시기부터 지역사회의 불편한 시선은 시작되었으며, 단체가 자리를 잡기도 전인 2001년에는 소위 ‘밥꽃양’사태에 휩싸이며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 변함없는 활동과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중심단체로 성장했지만, 당시의 상흔은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울산인권운동연대의 창립은 2000년 6월 23일이다. 인권과 관련한 개념도 모호하던 시기에 지역에서 민가협이 아닌 인권단체를 만들겠다는 도전은 당시 진보진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1999년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이 울산을 중심으로 발생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긴급하게 구성되었다. 대책위는 전국의 인권단체들을 방문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인권단체라고는 민가협 밖에 모르던 시절,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수많은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구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인권단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1999년 11월 12일 매주 울산지역의 인권현황을 알리는 <주간울산인권소식>²⁴⁾이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울산인권운동연대라는 이름의 단체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주간인권소식지를 발행한 것은 울산인권운동연대라는 신생단체를 알리기 위한 장치이자, 울산지역에서 개최되는 모든 집회와 시위현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10여년 동안 매주 발행되는 소식지는 울산지역 진보운동의 기록이다. 울산인권운동연대는 어떤 집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가하여 묵묵히 현장을 기록하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서서히 지역시민사회에서 울산인권운동연대의 존재를 각인시켜가고 있었으며,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와 함께 ‘국가인권위’ 대응을 위한 인권단체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 상임공동대표직을 맡는 등 전국적인 연대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활동을 전개했다.

열악한 재정구조로 쥐꼬리만 한 상근활동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도 못했던 시기였지만,

24) 주간울산인권소식은 1999년 11월 12일 제1호 발간 이후 2008년 6월 28일 제404호까지 약 10년 동안의 울산지역 진보진영의 역사를 기록하며 매주 토요일 발행되었다. 발행이 중단된 이후 반년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회원소식지 <인연>을 재구성하여 2009년 3월부터 월간 <인·연>을 발행, 현재까지 매달 발행하여 울산지역의 인권소식을 전하고 있다.

열정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서서히 지역의 인권단체로서 자리를 잡아가던 중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다. 2001년 9월 제2회 울산인권영화제 준비과정에서 소위 '밥꽃양'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소위 '밥꽃양' 사태는 '사전검열'이라는 이름으로 순식간에 확대되어 퍼져나갔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엄청난 댓글로 도배되었으며, 수많은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다. 심지어 단체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되었다.

너무도 혹독했다.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쏟아지는 비난과 성명 속에서 단체는 활동중단을 선언하고 5개월 정도의 휴식에 들어갔다. 창립한 지 2년도 채 안 된 인권단체인 울산인권운동연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시련이었다. 그 이후 한동안 연대사업을 두려워했다. 지금도 전국적인 연대사업에는 소극적이다. 20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② 10주년 그리고 인권교육센터, 인권연구소

울산은 노동운동의 메카라는 자부심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노동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진보정당운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시작이 울산에서 시작되었다고 평가할만하다. 울산의 동구와 북구에서는 진보구청장과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의회까지 진출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증명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을 제외한 진보운동진영과 시민사회는 매우 취약하다. 새로운 활동가의 배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사회운동은 점차 시들어가고 있다.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서로를 응원하지 못하는 사이 시민사회는 급격히 왜소해졌다.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 국정농단에 맞선 전국적인 촛불항쟁에도 울산지역의 촛불은 노동운동의 메카라는 명성이 부끄러울 정도로 촛불 시민의 함성은 미약했다.

10주년을 맞이한 2010년 울산인권운동연대는 10주년 기념심포지엄 <인권, 지역에서 길을 묻다>를 통해 지역시민사회와 노동운동 그리고 인권운동의 만남을 모색했다. 이명박 시대 인권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투쟁을 기획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10주년 행사에는 전국의 인권단체들도 함께 참여했다. 광주, 전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등의 타 지역 인권단체들이 지역과 인권이 만나는 사례발표를 통해 경험을 공유했다. 이후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간의 교류사업이 제안되어 울산을 시작으로 지역순회를 통해 지역인권단체네트워크가 한동안 진행되기도 했다.

심포지엄 이후 울산인권운동연대는 관련 시민단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부설기관인 인권교육센터는 울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참여를 통해 노동인권교육 사업을 공동추진하게 되었고, 장애인부모회, 청소년문화공동체 함께, 울산시민연대 등과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공동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인권교육센터는 2019년부터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울산인권교육플랫폼'을 제안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권교육플랫폼은 울산지역 인권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울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강사, 성폭력, 가정폭력 강사 등 지역 내 강사단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강화과정은 2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지역인권운동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에 대한 도전²⁵⁾도 다시 시작했다. 진보정당과의 공동사업으로 진보정당 소속 시·구의원, 울산대학교 인권법학연구센터와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연구작업 결과 북구와 동구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인권기본조례제정 이후 지자체 인권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인권연구모임을 ‘인권연구소’로 개편하였다. 이후 각종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인권행정에 대한 연구성과를 축적해가고 있다.

③ 20주년 그리고 의제설정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의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인권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연대사업을 제안하고 집행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예컨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울산시민사회단체(66개 단체) 긴급기자회견을 제안하여 강연회와 사진전시회 등을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매주 일요일 캠페인²⁶⁾이 이어지고 있다.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대응을 위해서 울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울산YMCA, 울산YWCA,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흥사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대학교 인권법학연구센터를 조직하여 ‘울산자치경찰제대응네트워크’를 결성, 긴급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개최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울산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대응사업을 전개하여 성과를 이뤄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하여 지역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연대사업을 제안하였다. 20주년 기념사업 ‘혈오와 차별을 넘는 인권, 지역에서 길을 찾다’에서 코로나19와 지역사회 대응방안 토론회를 진행한 이후 33개 단체를 조직하여 ‘코로나19 울산비상행동’을 결성, 울산시의 코로나19 정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상임대표로 있는 울산교육연대 주최로 진행된 진보교육감 평가토론회 및 2기 진보교육감 정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시의회 교육청 관련 3대 조례(청소년노동인권조례, 민주시민교

25) 울산지역 인권제도화 운동은 2001년 12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에 참가하여 소개받은 ‘일본의 인권조례’ 사례를 울산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2002년에 캠페인방식으로 추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활동 추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은 시의회 법무담당관실의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조례제정은 불가하다는 판단과 보수정당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아쉽게 종료되었다.

26) 8월 7일 현재 제78차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미얀마 민주주의지지 캠페인은 초기에 울산인권운동연대가 제안하여 강연회와 사진전시회,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으며, 지금은 울산이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매주 일요일 캠페인을 유지하고 있다.

육조례, 학부모회조례) 제정을 위한 투쟁 등을 주도하면서 지역이슈 등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했다.

울산인권운동연대는 20주년을 전후로 지역문제를 인권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의미있는 두 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울산인권포럼’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울산인권포럼은 인권관련 이슈와 관련한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이다. 인권포럼은 지역의 이슈를 인권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자리이자, 인권의제 설정의 공간으로 기획된다.

예컨대, 제1회 인권포럼은 ‘사회복지 종사자 노동권 보장에 관한 검토’로 진행, 장애인활동보조인의 노동권과 중개기관 사이의 갈등을 당사자 토론으로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이후 인권포럼은 2022년 7월 제16차 인권포럼 ‘울산학교인권기구의 현실과 네트워크 구축’까지 꾸준히 진행되며 지역인권이슈에 대해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를 초청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기업과 인권’이다.

노동운동의 메카 울산에서 ‘기업과 인권’이란 주제로 강연회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기업의 인권존중의무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운동을 통한 노동기본권 강화 투쟁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017년 이후 공기업에 대한 인권경영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울산인권운동연대는 인권보호책무가 있는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점검하고,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강조하여 현대중공업 등에서 발생하는 원하청문제 등 노동인권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기업과 인권’에서 배제된 노동권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축을 이전시키기 위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후속사업으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민주노총 운영위원회 정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④ 활동가 중심 vs 회원 중심의 활동

여전히 남는 문제는 재정이다. 상근활동가의 활동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단체운영은 불가능하다. 창립부터 10여 년은 상근활동비조차 건너뛰기 일쑤였다. 활동가 개인의 희생으로 버텨온 힘든 시절이었다.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절마다 재정사업을 진행하고, 2년에 한 번씩 후원의 밤 행사를 통한 모금도 진행했다. 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재정방안은 역시 회원배가다. 매년 회원배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원 수가 400명에 못 미치고 있다.

2006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며 회원모집 강화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도 했지만, 좀처럼 회원수가 늘어나지 않았다. 인권침해 구제활동을 통해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후원회원으로 가입하는 정도였다. 회원과 함께하는 사업을 전개하며 후원회원 중에서 핵심적인 활동회원을 배가하려 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았다.

여전히 활동가 중심의 단체이지만, 형식은 사단법인으로서 갖춰야 할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구조를 통해 결정하는 어정쩡한 운영이 한동안 이어졌다. 지속가능한 지역의 인권단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다.

1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며 2010년 8월 28일 ~ 29일, 1박 2일간의 하계워크숍²⁷⁾을 개최했다. 활동가와 운영위원, 이사 등 핵심회원들이 함께 모여 울산인권운동연대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토론하고 결의를 모으는 자리였다. 상근활동가들의 희생에 근거한 운동을 지양하기 위해 기본적인 노동조건(최저임금, 4대보험 가입 등)을 보장하는 결의가 이어졌다. 조직을 세분화하여 활동회원들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10주년을 기점으로 인권연구소, 인권교육센터 등 부설기관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활동회원들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재정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회원대상의 사업을 배치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울산인권마라톤대회, 시민인권학교와 인권평화기행, 인권영화공동체상영, 회원산행, 열린주방, 탈핵도보행진, 해파랑길트레킹 등 회원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기획하여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인권운동연대는 현재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각 조직별 운영위원회 등 기본적인 회의 구조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여전히 긴급하게 요구되는 인권사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근활동가 중심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3. 인권제도화와 지역인권단체의 역할

지자체 인권행정을 논의하고 도전해온 지 10여 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일부 단체장의 의지에 의존하여 인권행정이 추진됐다. 하지만 언제까지 단체장의 의지와 선의에 기반하여 인권행정을 펼쳐갈 수는 없다. 4년 주기로 바뀌는 정치지형에 인권행정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독립성이 부여된 지역 인권레짐의 구축, 비판과 협력이 가능한 인권시민사회가 있어야 인권행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자체, 지자체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지역사무소 그리고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인권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새로운 지역인권보장체제의 구상이 필요하다.

27) 2010년 8월 개최된 하계워크숍 이후 매년 7월 하순 활동회원 20여명이 참여하는 하계워크숍을 진행하며 조직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울산인권운동연대는 국가중심의 인권보장체제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상상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비슷한 고민을 함께하는 몇몇 지역인권단체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2020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전문위원회의 신설을 견인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권고한 이후 형성된 변화된 인권지형을 반영한 지역인권보장체제에 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인권단체들의 의견표명이 중요한 시기다.

울산인권운동연대는 지역인권단체로서 인권제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비록 2002년 인권조례 제정운동이 실패로 끝났지만, 인권제도화에 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2010년 인권조례연구모임과 이후 인권연구소의 운영을 통해 인권제도화를 모색하고 지자체 인권정책을 연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조례 권고안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과정²⁸⁾과 이후 지역별 설명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울산시를 비롯한 5개 구·군 기초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주도했다.

울산광역시 북구와 동구에서는 진보구청장이 집권한 상황이었기에 인권위원회 구성과 인권정책수립 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인권행정을 실현하는 데 일조하였다.

2020년 울산시 인권담당관 신설을 위해 시장 직속 자문기구인 ‘미래비전위원회’에 참여하여 인권구제기관 설치와 관련한 공개제안과 시장면담 등의 과정을 거쳐 2021년 부시장 직속 인권담당관실(인권정책담당, 인권센터) 설치를 이뤄냈다. 이후 울산시 인권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대상 인권교육, 인권라운드테이블, 인권관련 토론회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타 울산교육청의 학생인권지원센터, 울산대학교 인권센터의 설치와 관련한 토론을 주도하고, 센터의 설치 이후 사업계획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등 개입력을 높여내고 있다. 울산인권운동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울산시 인권센터, 교육청 학생인권지원센터, 대학인권센터를 포함하는 지역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매개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권제도화의 요구와 추진은 지역사회의 인권을 확장하기 위한 유력한 방도로 제안되었다. 국가의 적극적인 인권보장 책무를 요구하는 인권제도화는 시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행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경향은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지역의 교육청, 경찰청, 검찰청, 공공기관 및 공기업, 대학교 등 공적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확산하는 인권제도화를 책임지는 행정기관과 담당자가 여전히 인권을 낯선 언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지점이다.

결국, 인권제도화의 안착을 위해서는 인권단체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권행정의

28) 전남대에서 수행한 ‘인권기본조례 표준조례안 연구용역’의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조례안 마련에 함께 했다.

성공은 제도의 힘이기도 하고, 시민사회의 힘이기도 하기²⁹⁾때문이다. 비록 지역의 작은 역량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개입해야 하는 이유다.

문제는 지역마다 인권역량이 천양지차라는 사실이다. 서울 등 몇몇 지역을 제외하면 지역의 인권역량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인권기본조례에 근거한 인권위원회 구성도 쉽지 않은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다.

4. 나가며

지역에 기반한 인권단체로서 좌충우돌하며 짧지 않은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인권의 가치가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협력과 긴장을 수시로 오가며 울산시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인권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인권의제를 제기하고 공동의 투쟁을 조직했다. 비록 크지 않은 조직이지만 인권에 반하는 정책과 관행에 맞서 누구보다 먼저 지역사회를 추동하며 연대를 주도하고 있다.

여전히 재정은 불안정하다. 새로운 인권활동가의 충원도 불투명하다. 하지만 울산인권운동연대에 요구되는 지역사회의 바람과 인권운동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한발 더 나아가갈 것이다. 울산인권운동연대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권운동단체로서 회원들과 함께,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인권운동을 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나갈 것이다.

인권평화기행에 함께했던 회원의 기행 후기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울산인권운동연대! 왜 단체명이 이렇죠?”라고 묻자 박 대표는 “인권, 운동, 연대” 모두 중요해서 하나도 못 버리고, 거기다 지역까지 붙여 “울산/인권/운동/연대”가 되었다고 한다. 시작이 화려한 곳은 많다. 그리고 사람이 북적거려야 할 곳에 사람이 사라져가는 것을 많이 보았다. 나는 무엇이든 유지되려면 거기엔 온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엇이든 오래가는 것을 보면 독배기의 온기와 썩스러운 환대가 있고 반드시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지레짐작한다.

29) 박진, '인권제도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시선', 2017 제3회 한국인권회의-지역사회와 인권 '현황과 과제', 2017, 391면.

토론2

시민, 인권과 만나다

김성연(수원지역 탈조직범소속)

수원 지역 운동 30년,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수원의 시민운동 30년사³⁰⁾를 기록하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저의 작년도 하반기는 몹시 숨찼습니다. 1991-2020년까지 수원 지역을 기반으로 일어났고, 일구었던 시민운동 30여건을 선정했고, 그 가운데 중심역할을 했던 활동가 28명과 인터뷰하고 그 구술기록을 책으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선정된 시민운동들 중 수원인권영화제(1996-2006), 시민운동단체 연대활동 및 지역운동

30) 수원시민운동 30년 활동가 구술기록집, 사단법인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2021년 12월 3일에 편찬함. 수원 지역 시민운동을 1991년부터 5년 단위로 기간을 구분하고 각 기간에서 주요했던 시민운동을 회고하며 32가지 사안을 정하고 그 사안에서 중심되게 역할했던 활동가 28명의 인터뷰를 구술 기록함. 더 많은 사안들이 선정되었으나 인터뷰어를 찾지 못하거나 허락받지 못해 포함되지 못한 사안도 있고, 선정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는 단체 의견도 있었듯이 한계가 있음. 단체별 운동사로 남겨졌거나 유실이 우려되는 시민운동 기록을 수원 시민운동사로 모아내어 연표 작업을 하는 것을 초기에 목표하였으나, 데이터 수집 작업에 있어 어려움과 봉착하면서 활동가들의 기억과 증언을 구술 기록하는 것이 주된 축이 되었음. 지난해까지의 작업을 첫 삽으로 하여 연표에 모아내는 지속적으로 작업이 과제로 남김.

포럼 운영(2009년 시작), 수원촛불(2008-2014), 경진여객 문제해결을 위한 수원시민대책위원회 행동(2013)의 4가지 활동³¹⁾에 대하여는 당시 다산인권센터에 소속되었던 활동가에게 물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진행했습니다. 이 사안들 뿐 아니라 다산인권센터는 수원 시민운동사에서 여러 시기와 사안에 중심 역할자로 연루(?)되어 있었습니다.³²⁾ 물론 기획단이 제한된 기간과 역량 속에 판단하고 정리했기에 미처 담아내지 못한 활동과 사안들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기록작업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수원 운동사 기록을 시작하자고 문 두드린 데에 의미를 두는 지점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한계를 감안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오늘 30주년의 다산인권센터를 되짚어보는 데에 도움이 되라고 딱 일 년 전에 이 작업을 수행했던 것 아닐까 합니다.

수원인권영화제, 영화제를 빙자한 강력한 주장³³⁾

비교적 자리를 잡은 시점의 영화제가 제 인식에서의 시작 이어서였을지, 당시 소속되었을 때의 업무와 일정으로 매년 참석한 것은 아니어서였을지, 수원인권영화제가 당시 편안하게 앉아서 그저 감상하는 ‘아름다운’ 자리가 아니었던 것은 작년 운동사 기록작업의 인터뷰를 통해서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영화관(기억하시는지. 팔달문 드림플러스라고) 지하층에 있는, 평상시에는 창고로 쓰나 싶은 작은 홀에서 새만금 반대 주민들의 투쟁을 담아낸 다큐를 보았던 기억을 찾아내었습니다. 새만금 독이 연결되던 시점, 태극기 흔들며 기뻐하는 시행측과 절망하고 저항하는 주민측의 대조적인 장면이 잔상으로 오래도록 남아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권운동단체로서 준비해가며 모델로 삼았던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사상표현의 자유를 모티브로 한 영화제를 제안하고 지역에서 진행할 단체를 모집하는데 경기 수원은 다산인권센터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문제의식을 문화적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가자는 취지였어요. 1996년도에 수원인권영화제를 하게 되요.

영화제가 탄압도 있고 이슈도 되고, 전국에서 전달해가며 상영하다보니까 여러 에피소드들도 있었어요. 상영시간은 되었는데 작품이 오지 않고 있고 직전에 받아 들고... 감독, 관람자들의 대화의 시간도 하고요. 초기에는 탄압이 있어서 대관이 안 되기도 하고 교동교회에서 많이 했어요. 영화 사전 검열이 위헌 결정되고 검열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

31) 4가지 사안에 대해 송원찬, 박진, 안병주 활동가를 인터뷰했다.

32) 5건의 시민운동 지점에 3명의 활동가와 인터뷰했던 수원환경운동연합도 있음. 1.이의지구 광교신도시 개발 반대 운동 2.북수원 민자도로건설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3.가습기살균제참사규명 수원시민공동행동 4.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5.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 활동에 대해 장동빈, 윤은상, 이인신 활동가와 인터뷰하고 기록함

33) 송원찬 활동가 인터뷰 중. ‘아름다운 영화제가 아니고 당시로서는 영화제를 빙자한 강력한 주장이었던 거죠’

지만 요건들이 강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영화제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어요.

박진 활동가와 나는 법률사무소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꿈이었어요. 거기서 예산도 받고 직원으로서 규정되어 소송 대응하는 역할로는 양이 차지 않았고 그 이상의 활동을 지역사회에서 해야 한다는데 토론과 논의가 있었어요. 확장되어가는 고민들을 계속했고 다산인권센터로 분리되면서 변호사가 소장이었던 체계들을 전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무법인 다산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더욱 시민운동이나 지역운동에 관심 갖고 연대를 하고자 했죠. <2021. 9.3 송원찬 활동가 인터뷰 중>

법률사무소 부속 상담소의 태생적 한계를 넘어서고 독자적인 인권운동의 입지를 구축해 갈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송원찬, 박진 활동가가 직면하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 연대체계를 만들어 진행해간 수원인권영화제는 이슈파이팅이 주요 활동 방식이었던 인권운동에서 시민들에게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인권 의제를 던지는 노력이면서 사전검열에 대한 또 다른 저항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원역 광장을 수원촛불로 밝히던 시절과 그 재현

올해 5월 다산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노동당이 연대하여 기후정의로 광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당위성·필요성·절박함이 다 와 닿으면서도 안쓰러움이 먼저 앞서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고된 길을 또다시 나서게 하는 현실. 수원촛불의 수요일이 새로운 버전으로 변주되고 있지만 결국 기후위기로 총체되는 불평등과 정의, 전환과 변화를 외치는 것입니다.

수원촛불을 한마디로 정리하기엔 너무 어렵네요. 촛불집회는 2002년 미군장갑차에 의한 압사사건과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 등이 전국적으로 있었지요. 수원에서도 관련한 집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매주 정기적으로 수원역에서 진행한 촛불집회의 경우 2005년 ‘길바닥 평화행동’이 처음이었던 거 같아요. 당시에는 ‘수원반전평화연대’ 차원으로 진행했었는데, 당시 쟁점이었던 ‘이라크 전쟁’에 관해 정말 소박한 촛불을 시작했었어요. 이 ‘길바닥 평화행동’은 1년 가까이 진행한 거 같고요, 이 흐름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다시 시작된 거지요. 한 5년 정도 했던 거 같아요.

촛불 집회라고 하는 문화제는 사실 서울 광화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 같아요. 2008년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로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기자회견, 향의 방문 등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행동했었어요.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드는 흐름이 생기고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부터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흐름이 수원에도 이어졌고 특히 그때 온라인 카페 중심의 커뮤니티 모임들이 활발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 친구들이 시민단체들의 수원 촛불에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공식적으

로 회의를 해서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온라인 커뮤니티들대로 돌아가고, 촛불 집회가 계속 되면서 ‘수원촛불광장’이라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죠. 이 공간 운영은 단체들이 조직되어 집행위원을 뽑아 실무를 맡는 시민운동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었어요. 온라인 카페들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운영진 몇 명을 구성해 놓고 자발적으로 집회를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흐름과 기존의 시민사회운동의 흐름이 촛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결합이 됐던 거였어요. 그 시너지가 수원 촛불의 초반과 중반까지는 잘 이어졌어요.

희망버스 한진중공업 참가, 철도파업 등 민주노총 노동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왔던 시기여서 …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고 매주 수요일 날 수원 촛불을 개최하기가 물리적으로 힘이 든 상황에 부딪혔어요. 겨울에 추울 때는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앉아 촛불 집회를 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다보니, 힘이 빠지긴 했어요. <2021.08.24 안병주 활동가 인터뷰 중>

저는 고되었겠다고 짐작했지만 오히려 다산 활동가들은 그 과정에서 의미와 성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수원역 촛불광장에서 만났던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도 만나고, 희망샘도서관 인문학산책에서도 만나고, 이주민센터가 힘써야하는 순간에 힘써주는 역할로도 만나지는 등 시민행동과 활동이 교차하고 확장하는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성과는 많았죠. 기존에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이었어요. 촛불만 들었던 게 아니라 매주 뒷풀이를 했잖아요. 지겹게 뒷풀이를 해서 그때 먹은 술값으로 건물을 올리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매번 만나고 친해진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이 만나면 안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생기는 거야. 지금도 다산의 상당한 자산들은 그때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남았어요. <2021.8.27. 박진 활동가 인터뷰 중>

예로 ‘촛불총각’님이나 ‘젠틀매니아’님 등 정말 꾸준하게 나오는 시민 위주로 집회가 진행되었어요. <2021.08.24 안병주 활동가 인터뷰 중>

그렇게 광장은 시민과 활동을 연결하였고 활동가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이 주는 힘을 활동가들이 알게 되었어요. 활동가들은 늘 현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동자들이야 노동현장과 집회가 늘 있고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연대하고 이러거든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절박하고 우리가 간절하니까, 스스로 기획하고 매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계속 논의했어요. 그때는 지겹다고도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훈련되는 과정이었어요. 현장을 스스로 만들고, 그 현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게 활동가로서는 어디 보다 훌륭한 민주주의 훈련장이었던 거죠.

4대 의제 집행위원장을 같이 했던 사람이 저, 민주노총의 이선희, 다산의 안병주, 환경운동연합의 윤은상, 전교조의 서윤수 들이었거든요. 보통 때라면 사실 별로 안 만나지는 분야의 사람들인데 계속 만나고 협의하면서, 가족보다도 더 만나고 형제자매처럼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신의 의제를 넘나드는 횡적 연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2021.8.27. 박진 활동가 인터뷰 중>

촛불 드는 순간을 넘어서는 고민을 이어갔던 지역운동포럼

아예 정리를 해야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어요. 끝까지 남아 계속 유지하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가 안 된 어려운 상황에 돌입하다 보니,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자는 식으로 고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었어요. 저희가 다산이나 여러 활동가들하고 고민했던 건 이제 막 대중적인 어떤 저항의 흐름이나 이런 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 시민운동 역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지역운동포럼’을 개최하자고 촛불 중간쯤에 제안을 했었죠. <안병주 활동가 인터뷰 중>

연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건가 담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집회로도, 대책회의로도, 맨날 연대는 하는데, 뭔가가 일이 터졌을 때 연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걸 우리가 먼저 던지고 거기로 같이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서 지역운동포럼을 제안 했던 거죠.

수원촛불에 나오는 자발적 시민들과 진보적 담론이 만나졌으면 했고요. ... 우리 시대를 어떻게 진보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를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죠. 이야기 대상은 ‘깨시민’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우리 자신들로 보았고요.

지역운동포럼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그걸 벗어난 사람들한테는, 좋지만 내 업무 외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 잘 안 그려지고 객체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본인이 관심 있었던 세션에는 와서 참여도 하는데, 전체 세션에는 참여하기 좀 어려웠던 모습이 있었던 거죠. <박진 활동가 인터뷰 중>

저는 지역운동포럼in수원의 2011년 포스터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 지역운동?>의 주제로 주말 끼고 무려 4일간에 강연, 토론, 영화제(무려 밤샘), 이야기마당, 북토크, 워크숍 등으로 버라이어티하게 채워진 프로그램이었고, 시민운동을 내용으로 수원에서 이렇게 역량을 모아내기 쉽지 않았을 것임을 대변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획이었습니다. 업무와 개인적 일정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에 포스터라도 소장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보면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일했던 3,40대의 저는 고유 업무에 치여, 지역의 여타 활동에의 결합과 교

류를 후순위에 두게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단체에서 한참 역량을 발휘하는 활동가가 소속된 업무를 넘어서 만나고 교류하는 계기, 그런 연결을 업무 외의 영역으로 두는 조직문화의 문제들은, 지역운동을 고민하면 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한동안 멈추어있던 지역운동포럼을 2018년 <만남, 상상, 연대>라는 주제로 다시 흔들어 깨워지기도 했습니다. 청년 활동가들이 중심이 된 기획단은 포럼에서의 고민과 논의를 모아 '평등한 지역운동을 위한 약속문'³⁴⁾을 공들여서 정리해내었습니다. 평등약속, 잘 지키고 있나요?

뿐만은 아니었던 '함께'

수원운동사 30년 활동가 구술기록 외에, 저의 머리와 마음에서 찾아내는 다산의 활동상들이 있습니다.

2012년 5월 24일 수원시청 로비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한 <경기420 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특별교통수단 44대 확보 요구를 예산상 수용불가로 답변한 수원시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입장하는 장애인들을 불법점거라며 막았던 것입니다. 이에 농성이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투쟁단 집행부는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님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오다 시장으로 당선된 분이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상황은 다른 시에 는 바로 시장실 점거하고 들어가기는 했는데, 마지막 수원시에서는 협상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좀 막혔어요. 막혔던 이유가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법정 대수를 요구한 건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시장님은 보고를 잘못 받으셨던 거예요.

수원이라는 지역이 참 좋은 부분이 뭐냐면 수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연대해주었어요.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총도 달려왔고, 다산인권센터에서도 결합해주는 식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어요. 우리 장애인들만으로 농성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고,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연대가 필요하거든요. 수원에서는 그런 연대가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2021.08.12 신승우님 인터뷰>

수원시민사회는 농성장을 지지방문하고 목소리를 함께 내면서 중재와 협상에도 들어갔습니다. 농성장을 찾을 때마다 다산인권센터의 활동가 누군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

34) 1. 회의나 행사 등 공적 자리에서 발언 및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성별정체성/성적지향/학력/종교/장애/국적/출신지역/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외모에 대한 지적과 조롱뿐만 아니라 칭찬도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하지 않도록 합니다.
4.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5. 나이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초면에 동의 없이 반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6. 연애와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7. 안전하고 평등한 뒤풀이 문화를 만듭니다.

평등한 지역운동을 만들기 위한 경기·수원지역 활동가 네트워크 <https://rights.or.kr/1212> [다산인권센터:티스토리]

도 기억 남습니다.

희망샘도서관 인문학기획단으로서 오랜 기간 많은 생각과 활동을 공유해온 활동가 시민 Q천석님은 수원에서 살게 되면서 검색하여 찾은 다산인권센터의 인권강좌 참여하고 연결되어 희망샘도서관을 만나게 되었다고 줄곧 이야기합니다. 시민과의 접점은 또 다른 활동으로 연결되는 계기가 되어지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입니다. 희망샘 인문학산책에서 매해 담아내는 주제들과 비슷한 흐름이 많았던 다산의 인권공부방을 찾았고, 참고했고, 조정하는 협력이 있어왔다고 봅니다.

광장의 외침을 일상으로 가져오는 시민교육을 모색하는 '일상을 바꾸는 시민교육포럼'도 함께 했던 시도였습니다. 지금은 운영주체가 바뀐 수원시평생학습관이 플랫폼이 되어서 시민운동가, 시민교육자, 학교 교사와 교수, 연구자 등이 참여하면서 여러 주제들을 토론하고, 지역의 시민교육의 지형을 들여다보고, 수원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해가며 3년여 한참 모였다가 가라앉아 차마 종료를 선언하지 않은 채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협의회 빛길과 다산이 다른 자리에서 만나면 여전히 문제로 작용되는 시민교육의 지점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함께’를 어떻게?

희망샘 인문학산책을 통해 시민활동의 역량과 역할을 정체성 속에 두게 된 정하니님은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 등의 전국 상황에서 다산의 역할이 크게 보여졌던 만큼 수원 지역에서 잘 만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그녀는 '기후정의 광장을 열러라'를 제안하고 추진하는 중심에 선 다산을 열렬히 응원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불평등, 노동, 젠더, 빈곤, 자본주의, 공동체, 민주주의 등 각 분야에 집중하여 문제에 맞서온 활동가도 기후위기에 대해 공감은 한다하지만 자기 분야는 아닌 것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후위기를 부문이 아닌 삶의 문제, 인권의 문제로 받아 안고, 행동하는 다산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행보가 반갑습니다. 전문영역으로 나누어 집중하는 형태가 효과적이고 익숙했던 그간의 방식은 기후위기 앞에서 전환과 연대가 필요함을 함께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탈조직하고 범소속되어 활동하는 가운데, 참 다양한 시민이 기존의 시민단체에 속하지 않고 여러 영역에서 누가 시켜서도 아닌데 공익적 실천을 하고 있음을 만나지게 되면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혹은 동의하는 누군가와 그저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시민단체에 목적성과 절차를 맞추며 할 필요를 못 느끼거나 단체와 안 만나졌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민사회가 공익활동이라 규정하는 범위는 단체 중심입니다. 오히려 개별시민의 공적활동을 적극적으로 공익의 범주로서 놓아두고 더 신나게 활동하게 하

도록 돕고 연결하는 방식을 시민사회가 중요하게 연구하고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관심과 활동의 바탕에 인권 의제가 자리하게 하기 위해서도 다산의 관심영역에 시민활동을 두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작년에 인터뷰했던 활동가들 대부분은 단체 활동가들이 소속과 분야를 넘어서서 교류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활동가들은 그러한 교류가 부담되는 조직문화와 업무량의 여건 속에 있습니다. 활동가의 만남과 교류가 추동되어 나오게 하는 장치가 무엇일지 시민사회 어딘가의 고민이어야 하는데, 다산이 제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서른 살이 있었고, 그 시기의 무거움(분명할 줄 알았는데 분명치 않음)과 미진함(이룩할 줄 알았던 어느 정도가 상당히 미미했음)으로 축축했던 마음이 꽤 오래, 꽤 깊이 차지했던 것이 기억나기에 다산의 30주년을 축하한다는 말보다 애쓰셨고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3

인권단체는 노동권과 어떻게 만나는가?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보고서를 통해 다산인권센터의 30년 활동을 보면, 주요 활동 의제에서도 사회권의 비중이 많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사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보고서 p52. 활동의제 정리 참조) 다산인권센터가 지난 30년간 노동자와 만나왔던 모습을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면서, 노동권과 인권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그 만남을 더 확장해갈 것인지에 대한 작은 고민을 엿어본다.

1. 노동인권과 노동권의 확장

다산인권센터에서는 노동권과 노동인권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 같다. (보고서 p26. “다산인권센터 노동교육팀, 2011” 인터뷰 참조) 노동권은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노동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다면, 노동인권은 사업장을 넘어, 노동자의 모든 삶에서 부딪치게 되는 모든 사안에서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권을 무시하거나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의 권리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보고서 p25)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노동권’/‘노동인권’으로 명명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노동권의 확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예를 들어 ‘아프면 쉴 권리’를 이야기할 때 사업장에서의 유급병가를 생각하곤 한다. 그런데 ‘아프면 쉴 권리’는 모든 시민의 보편적인 권리이므로 사업장에서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상병수당’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픈 노동자가 집에서 쉬려고 할 때에도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상태라면 쉴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해 돌봄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권’은 제도화되어 있는 사업장 안에서의 권리로서만이 아니라 노동자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확장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노동권’의 성격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권은 노동자들이 싸워서 만드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하루 적정 노동시간은 8시간’이라는 인식도 사회적인 투쟁의 결과이다. 노동권은 투쟁 없이 시혜로 주어질 경우 실제의 권리가 아닌 경우가 많다. 한국의 노동법은 탄생 초기 세계인권선언과 이미 노동권이 발전한 나라의 법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나 단지 법전 속의 권리였을 뿐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노동법에 담긴 노동권이 현실화 한 것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였다. 그런데 8시간 노동이 제도화되더라도 ‘과로하지 않을 권리’는 여러 사회적 여건에 의해 가로막힌다. 출퇴근 시간이 긴 것도 문제이고, 저임금 때문에 과도한 노동을 ‘선택’하게 되는 노동자들도 있다. 따라서 ‘적정 노동’을 위한 투쟁은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으로만 좁혀질 수는 없다.

노동권에서는 ‘단결권’이 매우 중요한 권리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노동권은 개별적인 노동자의 권리와 집단적인 노동자의 권리로 나뉜다. 개별적인 노동자의 권리는 최저임금, 안전한 노동, 해고제한, 노동시간 등 권리의 최소기준으로 제시된다. 노동자들은 ‘단결권’ 즉 집단적 권리를 통해 이 최소기준을 뛰어넘는다. 단결권이 사업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위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인권이 국가를 상대로 시민들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싸워서 쟁취한 것이라면, 노동권은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 그 자체와도 맞서 싸우면서 확장해온 권리이다. ‘노동권’은 아무리 제도화되더라도 그 권리가 사업장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많다. 노동권은 기업에 대한 적절한 제재 수단이 없다면 현실화되지 않는 권리인 것이다. 기업에 대한 적절한 제재수단이란, 기업을 규율하는 법, 기업에 대한 사회 여론, 노동조합 등이 있다. 기업에 대한 제재라는 면에서 노동권은 기업에 의해 고통받는 자본주의 사회의 많은 인권들과 연결되어 있다.

한국은 기업 중심 이데올로기가 주류이며, ‘노동권’은 매우 불온하게 인식된다. 자신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많다. 게다가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노동자들이 분할되어 있어서 노동권은 매우 불균등하게 주어진다. ‘노동자’로 규정되지 않거나

‘사용자’로 규정하지 않아서 권리와 책임으로부터 배제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최저임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제도를 만들거나 적용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라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생겨난다.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결권’에서도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많다. 보편성을 상실한 노동권을 모두의 것으로 확장하는 운동이 필요한 때이다.

2. 드러나지 못한 권리를 인권의 이름으로 명명하기

다산인권센터가 노동권과 만나는 방식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하는 것이었다. 보고서에서 따르면 그동안 다산인권센터는 SJM 용역폭력 사건, 쌍차, 케이블방송, 삼성반도체, 삼성전자서비스, 이한빛PD, MBC 계약직 아나운서 투쟁,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등 많은 투쟁에 함께해왔다. 보고서에서 “노동인권은 민주노조운동의 약화와 취약한 노동권이 라는 사회 조건을 고려해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조직하고 노동운동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었다.”(보고서 p5)고 이야기하듯, 다산인권센터는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데에 집중해왔다. 특히 다산인권센터는 노조라는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도 삼성 직업병 문제를 사회화하고, 반올림을 만들고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나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동안 다산인권센터는 노동 사안에서 대책위원회로 함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인권단체가 대책위원회에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단지 취약한 노조를 함께 지원한다는 것을 넘어서 ‘권리의 부재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산인권센터는 이한빛PD 대책위원회에 함께하면서 방송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데에 일조해왔다. 그리고 그 투쟁의 결과로 한빛미디어인권센터가 만들어져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발생한 사안 자체가 아니라, 노동권이 훼손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를 끈질기게 드러내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권리의 영역을 확장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삼성반도체의 직업병 문제에서 확인했듯이 이것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알권리’가 없는 모든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던 ‘알권리’를 노동권의 일부로 명명하고 인식하게 하는 것도 인권단체의 과제일 것이다. 폭염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법에 냉난방이나 적정온도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이것을 ‘권리의 침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데 ‘에어컨은 인권이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자신이 어떤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드러내어 권리로 명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인권단체와 노동조합의 만남

다산인권센터는 많은 노동조합과 만나왔던 것 같다. 특히 어떤 노동조합이 정권의 탄압이나 기업의 거센 탄압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일이 되거나 혹은 인권침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원해왔다. 이렇게 노동조합과 만나는 과정에서 지역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확장되고 깊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인권단체가 노동조합을 만날 때 그 노동조합은 어떻게 인식이 확장되고 인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 것일까?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한다고 해서 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이 분할되어 있고, 권리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 모두의 권리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권단체가 노동조합과 만나는 것은 한 사업장의 문제해결을 넘어 노동자들이 보편적인 권리인식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과정일 것이다.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문제, 즉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나 청소년노동인권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지원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내부의 차이와 차별로 눈을 돌리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인권단체들이 투쟁사업장의 농성장에서 ‘평등길 1110 인권영화 상영회’를 하고, ‘인권을 지키는 농성장 수칙’을 만들기도 한다. 투쟁의 공간 안에서 인권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투쟁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노동조합이 장애인조합원이 거리낌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노조활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조 안에서 노력하도록 하고, 평등단협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안내하는 역할도 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제기해야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산인권센터가 고민해왔듯이, 사업장을 넘어 노동자 삶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고민하며 인권운동의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을 확장하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폭우로 사망한 반지하방 주거민의 죽음은 곧 불안정한 노동자의 삶이다. 불안정노동자들이 주거권운동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때 지역의 노동자들이 촛불에 함께했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때에는 지역의 노동자들이 많이 함께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이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도 금지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노동자의 권리와 많은 이들의 인권이 만나는 지점인 것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에 함께하지 못한 것은 인권단체들이 충분히 설득하고 안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4. 지역에서의 노동권

다산인권센터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고민을 이야기한다. “몇 년 전부터 생긴 고민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공장 담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이 어떻게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안산에 ‘노동자 공제회’같은 사례가 있어요. 공단 조직화가 잘 안 되는 곳에서 오히려 시민으로서, 시민으로의 노동자, 그들의 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방식으로 공제회를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보고서 p25. 박진 인터뷰(2017)) 노동조합이 없거나 만들기 어려운 곳에서, 사업장에서의 노조설립을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다양한 권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조직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런 시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다산인권센터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노동운동의 적극적인 연대세력으로 시민들을 조직하는 것, 이것은 별도의 연대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각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보고서 p25) 자신의 시민성을 각성한 노동자, 자신의 노동자성을 각성한 시민들이 만나 변화를 모색해자고 하는 것은 의미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 다산인권센터가 지역에서 시민과 노동자를 연결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노동문제에 연대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각성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진중공업 85크레인으로 가는 희망버스에 함께했던 어린이책 작가들은 그 투쟁을 응원 하러 간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들은 비정규직을 주제로 한 ‘비정규씨 출근하세요?’라는 어린이책을 만들었다. 그러다 출판사와의 계약관계에서 늘 을인 자신들이 곧 비정규직이라는 자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노동권의 관점에서 ‘작가들의 권리찾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대’를 넘어 자기 삶의 문제를 자각하고 이것을 ‘노동권’의 관점에서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기업에 대한 감시’도 노동권과 지역이 만나는 장이다. 한국은 기업에 대한 통제장치가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이 노동자를 탄압하거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훼손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다.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환경문제나 소비자들의 권리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삼성공장의 불산누출 사건에 대해 다산인권센터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응했듯이,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매운동을 조직하듯이, 시민들이 기업을 감시하고 압박하는 활동은 때로는 지역시민과 노동권의 만남을 가져온다. 기업의 정보 공개 요구, 고발과 불매, 기자회견, 집회 등 지역사회가 다양한 의제로 기업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노동자들이 지역사회로 인식을 넓히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론4

연대, 인권운동

정복(인권운동사랑방)

30주년 보고서에서 분석하는 <다산인권센터> 활동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인권운동으로서 ‘연대’입니다. 이는 활동의제나 권리영역으로서 ‘노동인권과 사회권’과는 다른 다산의 ‘활동양식’ 차원의 분석틀이며 중요한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활동의 대부분이 연대를 통한 방식, 연대활동으로 이루어지고 드러납니다. 오히려 ‘연대활동’이 아닌 활동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방의 역사 속에서 ‘연대활동’이 주된 활동양식이 되게 된 과정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다른 어떤 운동보다도 ‘연대’의 방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권운동의 특징과 사랑방의 문제의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1. 조직의 분화, 독자사업의 축소, 연대전략 논의

사랑방 초기 활동가들은 독자적인 단체를 만들기보다, 인권운동을 횡으로 연결하고 정보와 자료를 공동 축적하며 인권의제를 발굴하는 일에 손발이 되는 ‘공동사무국’ 정도의 위상을 생각하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공동사무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했던 여러 활동들이 이후 사랑방 고유의 독자 사업으로 발전, 확장되게 됩니다. 인권하루소식, 인권자료실, 인권운동연구소, 인권교육실, 서울인권영화제, 인권오름이 그렇습니다. 사랑방의 이름으로 펼쳐내는 독자 활동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체의 활동영역을 더 확장하고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전문화된 영역을 독립시키는 인큐베이팅을 자신의 역할로 생각한 사랑방은 2000년대 중반 <인권연구소 창>, <인권교육센터 들>을 독립시키고, 2013년에는 <서울인권영화제>도 독립합니다. 인권하루소식에 이어 인권오름도 종간을 하게 됩니다.

2007~8년 사랑방은 내부적으로 중장기 전망논의를 진행합니다. 교육실, 연구소/자료실의 독립분화, 인권하루소식의 종간(인권오름 창간)으로 초기 사랑방과는 크게 달라진 단체의 활동조건(독자사업의 대폭 축소) 속에서 사랑방 활동을 새롭게 배치하고 중장기 전망을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랑방은 '진보적 인권운동의 전면화를 위한 연대전략'을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방 창립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인권현안 대응활동으로서 '연대활동'과 다른 측면에서 운동전략으로서 '연대전략'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2. 사랑방 운동전략, 권리영역/운동진영을 가로질러 대중의 힘을 변혁적으로 조직하자

2012~13년에는 20주년을 맞아 그간 사랑방 운동을 돌아보며, 이후 전망을 세우기 위한 운동전략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논의는 사랑방이 주어가 되는 독자사업/연대사업 틀이 아니라 이미 연대활동을 중심으로 권리영역별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던 사랑방 활동을 '체제변혁'이라는 지향과 관점에서 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찾고자 했습니다.

관점을 달리하자 그동안의 사랑방 활동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인권운동의 전문화, 대중화, 국제화를 외치며 활동했던 초기 활동 속에서도 변혁적 전망의 후퇴와 민중운동의 쇠락, 시민운동의 부상이라는 운동 질서의 변화 속에서 진보적 인권운동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인권과 권리 담론을 통해 민중투쟁/민중운동을 지원, 옹호하려는 노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운동질서가 형해화 된 상황에서 '체제변혁'을 향한 사랑방의 노력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다양한 소수자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다양한 권리들의 등장에 사랑방은 함께 했습니다. 반차별, 주거권, 건강권, 청소년/아동권, 노동권 등등. 동시에 인권의 제도화 흐름과 맞물려 이러한 권리영역은 더욱 전문화, 세분화되어갔습니다. 인권은 점점 주류화/대중화되어갔지만, 정작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찾기 어려워졌고, 인권운동/사회운동 단체의 역량은 위축되어 갔던 흐름이 함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권의 불가분성을 누누이 외치며 '진보적 인권운동'을 강조했지만, 사랑방도 권리영역별로 나뉘어 활동을 해오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여러 활동에 헌신적으로 연대했지만, 정작 사람을 조직하고 장소를 열어내는 역할은 당사자 대중 단체의 몫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와 고민 속에서, ‘권리영역/운동진영을 가로질러 대중의 힘을 변혁적으로 조직하자’는 사랑방의 운동전략을 세우고 활동을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자사업이나 연대사업이냐는 별로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대라는 이름으로 사랑방의 역할을 제한하거나 외부화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조직하는 인권운동의 활동양식으로 ‘연대’를 재해석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조직과 장소를 열어내는 것, 연대와 결속을 새롭게 복원하는 것, 인권의 대중화가 아니라 대중운동 속에서 살아 숨쉬는 저항과 주체의 언어로서 ‘인권’과 ‘권리’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3. 월담, 차제연, 기후정의동맹, ‘다른 세계로 길을 내는 활동가 모임’

그렇게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조직화 활동인 ‘월담’을 시작했습니다. ‘인권침해’라는 사건으로 드러나기 전에, 불안정 노동이 일반화된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조건이자 장소로서 ‘공단’에 주목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함께 목소리내지 못하니 ‘권리’가 등장하지 못하는 이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관계 맺는 장소를 열어내고자 했습니다.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의 연대가 아니라, 이 곳에서 불안정 노동체제에 맞서는 저항의 힘과 관계를 함께 조직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의 언어가 무기가 되길 바랐습니다.

반차별의 인권원칙이 차별받는 누군가를 보호하는 소수자들의 문제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보편적인 권리이자, 대중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차제연의 확대재조직, 다양한 분야로 차제연 활동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사랑방의 노력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제연 활동은 사랑방에게 연대활동의 하나가 아니라, 불평등과 차별이 만들어지는 물질 조건에 맞서 평등을 향한 관계, 대중운동을 조직해가는 활동입니다.

최근 활동을 시작하게 된 기후정의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연대체 활동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아니라, 기후생태위기는 보편적 삶의 조건 속에서 체제전환,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향한 요구가 체념이 아닌 변혁운동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기후생태위기 속에서 함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연대와 결속이 운동의 요구와 투쟁을 통해 형성되기를 바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방에게 기후정의동맹은 대중의 힘을 변혁적으로 조직하려는 운동전략이 시도되는 장소입니다.

작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다른 세계로 길을 내는 활동가모임’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던 (진보/변혁) 운동의 연대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입니다. 사랑방은 초기부터 인권운동 진영의 형성을 중요한 조직적 과제로 실천해왔으며(인권협/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운동더하기), 사회운동포럼을 통해 기존 운동진영을 횡단하는 연대를 시

도하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이슈와 현안에 따라, 또는 부문과 영역에 따라 고립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의 성과들을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축적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대질서 속에서 변혁 운동의 모색, 실천이 새롭게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연대전략의 필요성

인권운동의 ‘연대’는 다산이나 사랑방처럼 특정 당사자 권리/대중운동이 아닌 ‘종합인권운동단체’에게는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활동양식입니다. 수많은 인권 현안 속에서 투쟁 주체들은 인권단체에게 연대와 지지를 요청합니다. 함께 힘을 보태고 이를 매개로 새로운 관계와 활동들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측면에서 다산이나 사랑방처럼 독자 사업보다는 ‘연대’를 통해 이미 활동 대부분을 풀어나가는 단체들에게는 ‘연대의 원칙’보다는 운동전략, 연대전략의 구상과 실천이 훨씬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인권과 사회권’, ‘지역인권운동’에 대한 실천과 고민은 <다산인권센터>에게 ‘연대전략’에 대한 고민과 다른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지역인권운동을 일군다는 것도 지역운동의 막연한 활성화보다는 어떤 지향과 전략 속에서 지역운동의 성과를 어디에 어떻게 쌓아갈 것인지, 지역 인권 거버넌스에 대한 개입과 실천도, 시민사회운동과 인권운동의 연결자라는 역할도 어떤 지향과 방향 속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 개입과 연결인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의미 있는 실천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진보적 인권운동을 일구기 위한 지난한 노력을 함께 해 온 <다산인권센터>의 새로운 여정에 사랑방도 인권운동의 동료로 함께 하겠습니다.

종합토론



since 1992
창립30주년

오늘도
인권을
식시다



다산인권센터

30주년 기념식 2022년 10월 28일(금)
30주년 모금계좌 기업은행 111-199577-04-046 다산인권센터

